

SEPTEMBER. 2022

VOL. 124

tongsangnews.kr

09

통하는
세상

통상

youtube.com/tongsang

facebook.com/tongsangnews

다독일한
통상

노동과 통상



특집

FOOD
SECURITY

DROUGHT
WARNING

COVER STORY

글로벌 식량위기의 시대, 한국의 식량안보 전략은?

글로벌 특
무한경쟁시대,
반도체와 과학법

통상 탐구생활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 하상선
에코아이 탄소배출권사업본부 전무

통상 아카데미
자원 부국
말레이시아

발효

- ① 한·칠레 FTA 2004년
개선 협상 중
- ② 한·싱가포르 FTA 2006년
- ③ 한·EFTA FTA 2006년
- ④ 한·ASEAN FTA 2007년
추가 자유화 협상 중
- ⑤ 한·인도 CEPA 2010년
개선 협상 중
- ⑥ 한·EU FTA 2011년
- ⑦ 한·페루 FTA 2011년
- ⑧ 한·미국 FTA 2012년 최초
- ⑨ 한·튀르키예 FTA 2013년
- ⑩ 한·호주 FTA 2014년
- ⑪ 한·캐나다 FTA 2015년
- ⑫ 한·중국 FTA 2015년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중
- ⑬ 한·뉴질랜드 FTA 2015년
- ⑭ 한·베트남 FTA 2015년
- ⑮ 한·콜롬비아 FTA 2016년
- ⑯ 한·중미 FTA 2019~2021년
(나카르타,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 ⑰ 한·영국 FTA 2021년
- ⑱ RCEP 2022년

서명·타결

- ① 한·인도네시아 CEPA
- ② 한·이스라엘 FTA
- ③ 한·캄보디아 FTA
- ④ 한·필리핀 FTA

협상 진행

- ① 한·중·일 FTA
- ② 한·MERCOSUR TA
- ③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 ④ 한·말레이시아 FTA
- ⑤ 한·에콰도르 SECA
- ⑥ 한·우즈베키스탄 FTA
- ⑦ 한·중미 FTA
(과테말라)
- ⑧ 한·GCC FTA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18개 협정 58개국 발효



3조 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한국이 지난 8월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는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하고 러시아 ASE(로사톰 자회사)가 수주한 엘다바 지역의 1,200MW급 원전 4기 건설사업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 분야 수출이며 이번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앞으로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일감을 공급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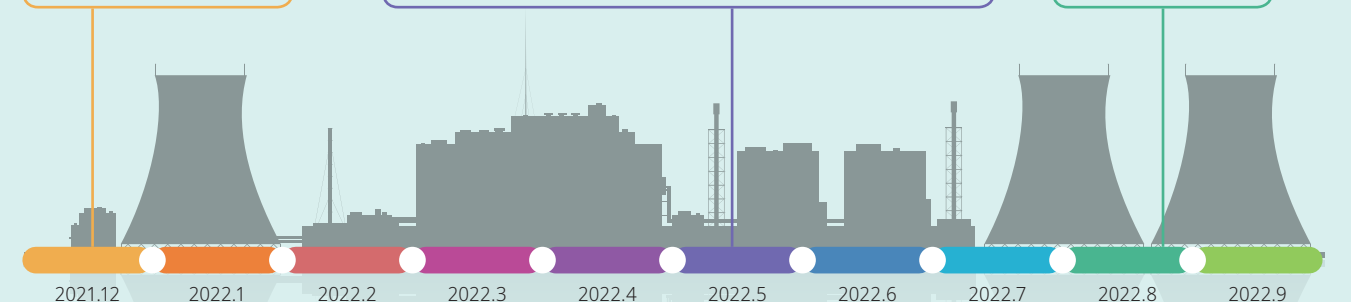
사업내용	VVER-1200 4기(4,800MW)
총 사업비	300억 달러
사업기간	2022~2030년
사업주	이집트 원자력청
주계약자	러시아 ASE(로사톰 자회사)
부지	카이로 북서쪽 300km
한국 참여 범위	기자재 공급, 터빈건물 시공 등 (93조 원 규모, 2023~2029년)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경과

한수원, 엘다바 원전사업
발주사(러시아 ASE)가
단독협상대상자로 지정

신정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선언(110대 국정과제)
·수출통제 등 관련 현황 점검(산업부, 외교부, 한수원, 전략물자관리원 등)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리스크 점검회의(산업부, 한수원 등)
·민관합동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현황 점검(원전수출전략준비단 등)

원전 기자재·터빈
시공 분야계약 체결



바로 보는
통상 관련
사이트



FTA 강국, KOREA
fta.go.kr



TradeNAVI
tradenavi.or.kr



YesFTA
customs.go.kr



UNI-PASS
unipass.customs.go.kr



OKFTA
okfta.kita.net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exportcenter.go.kr



08

COVER STORY

글로벌 식량위기의 시대,
한국의 식량안보 전략은?

02
FTA 한눈에

03
글로벌 브리핑

06
미리 보기
키워드로 읽는 식량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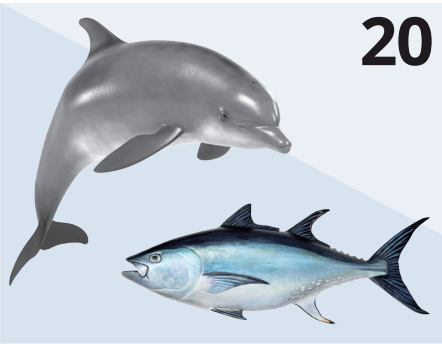
08
깊이 보기
세계 식량위기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전략

14
키워드 토크
글로벌 식량위기와 애그플레이션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 해법 모색

18
정리하기
세계의 식량안보와 공급망 교란

발행일 2022년 9월 1일(통권 제124호) 발행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동 13층 산업통상자원부(044-203-4893) 제작 협력 한국경제매거진㈜ (02-360-4816)

※〈통상〉에 실린 내용은 필자의 견해이므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지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



22



24



28



32



36



42

20
판례로 보는 통상
환경과 경제 사이의 딜레마:
②참치-돌고래 분쟁

22
통상 탐구생활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
하상선 에코아이 탄소배출권
사업본부 전무

24
글로벌 특
무한경쟁시대, 반도체와 과학법

28
한국 대표선수
세계 자주포 시장의 최강자, K9

30
해외무역 지상중계
(주)태성시스템

32
역사의 수레바퀴
포그 씨가 시간에
집착한 이유는?

34
응답하라 무역정책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으려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하세요

36
글로벌 트렌드
전기차 중흥 시대

38
통상 아카데미
자원 부국 말레이시아

42
FTA Analysis
수출기업의 한·영 FTA 활용을
위한 협정문 살펴보기

44
공급망 A to Z
식량보호주의와 수출제한조치

46
글로벌 통상 뉴스
미국, 반도체법
세부 지원기준 마련 본격화
정부 내 조정위 구성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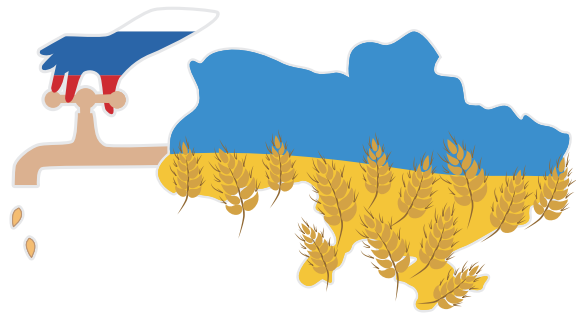
48
통상백과
新국제질서와 한국 경제의 미래 외

50
소통 마당
독자의견, 이달의 퀴즈

Book in Book
특집 노동과 통상

키워드로 읽는 식량안보

코로나19로 가뜰이나 불안정한 식량 공급망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식량안보가 새로운 통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6월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도 식량안보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식량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식량안보 위험은 곡물자급률이 낮은 한국에도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식량위기를 △러·우 사태 △식량보호주의 △이상고온과 가뭄 △애그플레이션 △식량안보 각료선언 등 5가지 키워드로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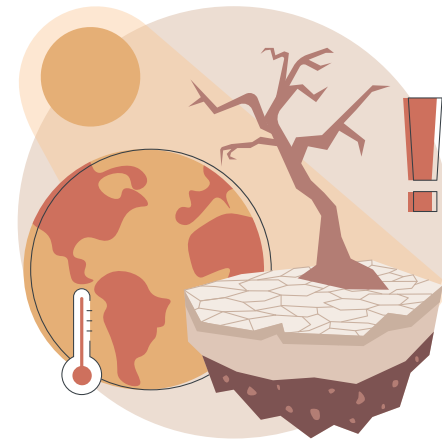


KEYWORD 1 러·우 사태

러·우 사태는 전 세계 밀 공급망을 단번에 망쳐놓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밀 수출국으로 두 나라의 밀 수출량은 세계 전체 수출물량의 3분의 1에 달한다.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남부 항구를 통해 매월 400만~500만 톤 규모의 밀을 중동과 아프리카로 수출해왔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곳을 봉쇄하면서 수출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을 돕기 위해서 별도의 화물·기차·선박 등 물류망을 가동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밀 수확시기를 앞두고 2,200만 톤 이상의 곡물이 창고에 묶여 있는 상태다. 사태 종결 또는 항구 봉쇄 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러시아가 지난 7월 튀르키예와 유엔의 중재로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 재개를 보장하기로 합의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곡물 수출 협정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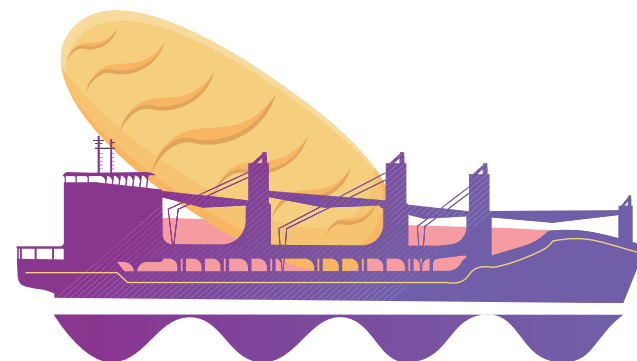
KEYWORD 2 식량보호주의

밀 시장이 얼어붙자 밀 생산 1위인 중국과 2위인 인도가 지난 5월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다.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마저 빚어지자 ‘자국 우선 공급’이라는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이다. 한국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2%(2020년 기준)로, 쌀을 제외하면 3.2%에 불과한 탓이다. 특히 밀·옥수수 등의 자급률은 각각 0.5%, 0.7%에 불과하다. 실제 밀에서 시작된 식량보호주의는 다른 곡물로 전염되고 있다.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식용유 가격 안정을 위해 한 달 가까이 팜유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집트 역시 밀, 콩 등 주요 곡물 수출을 중단했다. 튀르키예는 3월 초·중순부터 쇠고기, 양고기, 식용유 등의 수출을 금지했고 말레이시아는 닭고기 수출을 중단했다. 이 밖에 아르헨티나, 세르비아, 이란, 파키스탄 등도 농산물 수출금지 대열에 합류했다.



KEYWORD 3 이상고온과 가뭄

독일의 주요 물류 채널인 라인강이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일부 지역 수위가 30cm를 기록, 수운 물류가 마비 위기에 처했다. 가뭄이 세계적인 경기침체,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더해 또 다른 걱정거리로 부상하며 독일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선박은 좌초 우려 때문에 30~40%만 적재하거나 운송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국적인 급수 제한을 실시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농업과 조개 양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가리아의 경우 다뉴브강이 말라가자 긴급 준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콩 생산 1위인 브라질과 2위인 미국도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콩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세계 최대 옥수수 생산국 미국의 중북부 역시 가뭄으로 생산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변화가 콩과 옥수수 작황을 망치면서 식량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KEYWORD 4 애그플레이션

전 세계에 불어닥친 식량불안과 농산물 가격 급등은 필연적으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현상을 낳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반 물가까지 다 오르는 것을 뜻한다. 밀 가격은 최근 톤당 430유로를 돌파하면서 지난 3월 7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422.40유로를 갱신했다. 콩값 역시 최근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부셸(25.4kg)당 17달러를 웃돌고 있다. 최악의 가뭄으로 사상 최고가까지 치솟았던 2012년 9월 가격(17.71달러)을 곧 넘어설 전망이다.

밀, 콩, 옥수수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은 필연적으로 다른 물가를 끌어올린다. 밀을 사용하는 빵, 콩으로 만드는 식용유, 옥수수를 이용하는 가축사료 가격을 자극하고 이것들은 다시 수많은 제품의 비용을 올리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 임금까지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KEYWORD 5 식량안보 각료선언

지난 6월 12~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5년 만에 개최된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식량안보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농산품 교역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각국의 식량안보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또 주요국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면서 밀과 옥수수, 보리 등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도 전 세계적으로 WTO가 농산품 공급망 안정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다. WTO 회원국의 의견합치로 이번엔 채택된 식량안보 각료선언에서는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전 세계 농식품시스템 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수출제한조치를 자제하기로 했다. 또한 식량안보 목적으로 긴급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있더라도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투명하게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한경닷컴



지난 7월 23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만을 통한 곡물 수출을 재개하는 데 합의하면서 세계 식량가격이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사진은 지난 8월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에서 밀을 수확하는 모습.

세계 식량위기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전략

세계 식량가격 상승과 공급불안 현상이 심상치 않다. 경제이론상 국제무역은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과 원자재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 기상이변과 함께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식량자원 보호주의 현상은 이 기대를 무너뜨리고 국제 식량 시장과 공급망을 크게 교란하고 있다.

글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사진 한경DB, wto.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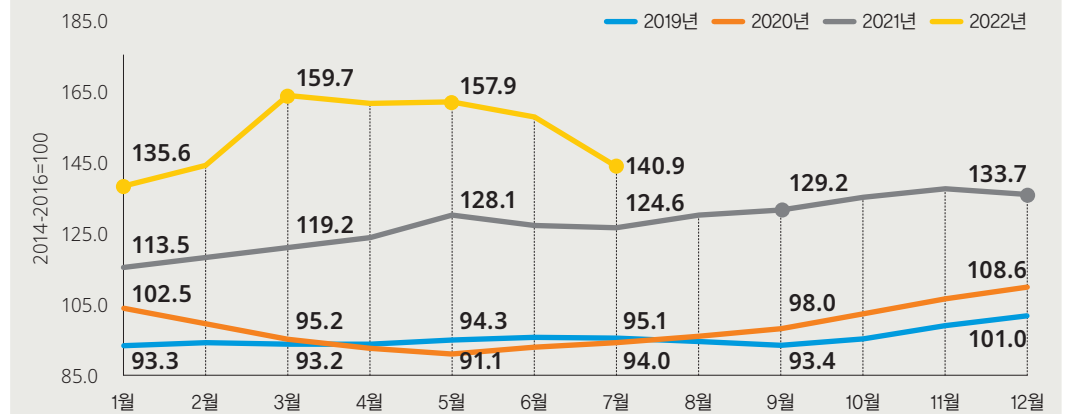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식량가격지수¹⁾는 지난 3월 최고치인 159.7포인트를 기록한 후 4개월 연속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세계 식량가격

지수는 149.7로 2019년도 평균 가격지수인 95.1 대비 57.4%나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세계 식량가격이 크게 오른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부족 때문이다. 세계 식량의 주요 생산국인 미국, 유럽,

1)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996년부터 24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하고 있다.

세계 식량가격지수 변화 추이(2019년 1월~2022년 7월)



자료: 블룸버그 SPLC; KIET 산업경제(이준, 2022.2)

호주, 아르헨티나, 중국 등 세계 전역에서 대규모 산불, 폭염과 홍수 등 극심한 자연재해로 식량생산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세계 인구의 증가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경제발전 및 소득증대에 따라 식량수요와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용 곡물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지속으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량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활한 운송과 물류 유통에도 차질이 생겼다. 게다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여파까지 더해 식량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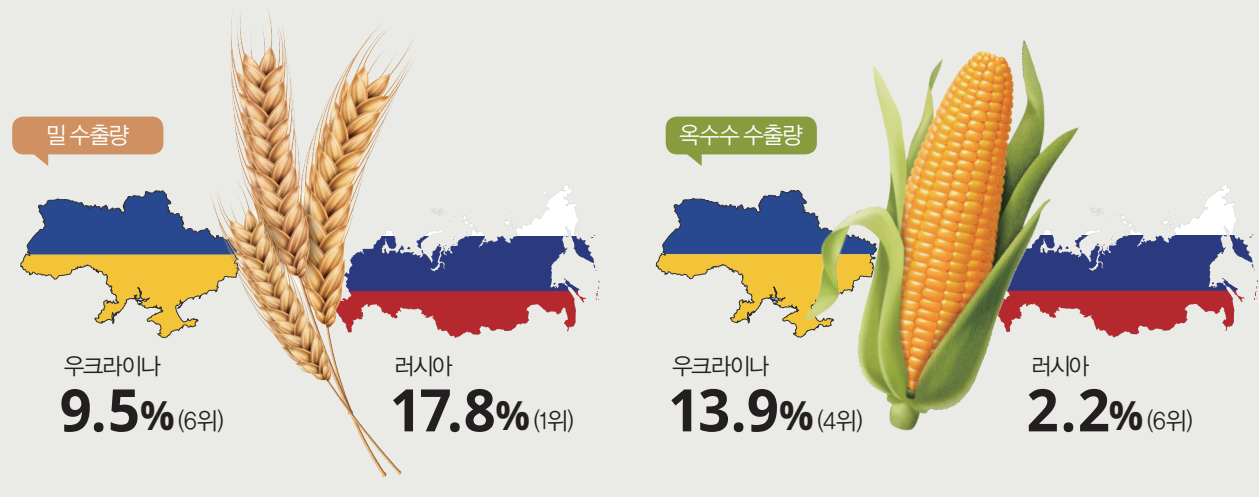
애그플레이션(agflation) 현실화

더욱이 코로나19와 러·우 사태 장기화, 이상기후 등으로 식량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자원 보호주의가 인도, 필리핀, 이집트, 헝가리, 카자흐스탄, 알제리 등 신흥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2022년 7월 말 기준 32개

국가에서 자국민을 위한 식량확보와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53개 식량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금지, 수출제한, 수출세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식량작물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베트남 등은 비료 수출도 금지시켰고, 전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석유 등 에너지와 비료 등 농자재 가격도 상승하는 등 식량 생산을 위한 환경은 점점 악화일로에 있어 국제 식량가격은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여러 요인에 의해 글로벌 식량 부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식량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견인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현상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유로모니터 추정치에 따르면 2022년 세계 평균 물가상승률은 7.9%로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예측됐다.

또한 국제적으로 식량(특히 곡물) 교역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수출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전 세계 밀·옥수수 수출량 비중(2019~2021년 평균)



반면에 수입은 많은 국가로 분산되는 공급 과점적 시장이라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농산물 무역이 자유화되면서 식량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생산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 작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상위 5개 수출국의 수출 점유 비중이 2021년 기준 쌀 79%, 밀 63%, 옥수수 88%, 콩은 97%에 달한다. 이와 같이 세계 곡물 공급이 소수 수출국에 집중돼 있기에 일부 수출국의 공급 불안정이 바로 국제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직결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식량안보가 국제 문제로 부상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농경지 감소 및 물 부족 등의 여건은 식량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식량 수출국들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글로벌 식량위기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식량안보 확보가 각국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세계가 직면한 식량위기 이슈가 주요 의제로 부상했고, 이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 노력 차원에서 식량안보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대한 각료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글로벌 농식품시스템 회복력을 위한 불필요한 수출제한조치를 자제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각국이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또 WFP가 인도적 원조를 위해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수출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식량안보 관련 WTO 각료선언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리·우 사태로 촉발된 식량부족과 가격폭등 현상이 글로벌 경제위기와 인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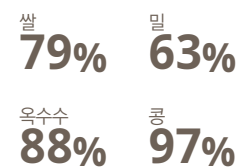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도 식량위기가 주요 의제로 부상해 '식량안보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대한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곡물별 5대 수출국



곡물 수출 상위 5개국 점유율(2021년 기준)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다행히 최근 세계 식량가격이 우크라이나 수출재개와 주요 생산국 수확 개시, 전 세계적 수입 수요 둔화 등에 따라 간신히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주요 곡물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 국가들의 극심한 가뭄 등 이상기후로 식량공급 부족과 가격상승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내 주요 곡물 재고율 취약

어느 국가에서나 식량은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원천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실제 식량안보 확보는 국가이익과 생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역사적으로 식량자급 능력이 충분하고, 해외로부터 효과적인 식량조달

능력이 있는 국가의 경우 식량위기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는 식량위기에 봉착하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공산품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급등할 때 소비를 조금 미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식량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소비를 늦출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안보문제로 간주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글로벌 식량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020년 기준 20.2%로 미국(120.1%)은 물론 일본(27.3%)에도 크게 못 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 동안 쌀 자급률은 92~105%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밀, 콩, 옥수수 등 다른 식량작물의 자급률은 0.5~9.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밀, 옥수수 등 사료곡물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매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사료곡물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70년 80.5% 수준에서 2020년 20.2%로 지난 50년 동안 60%포인트나 크게 하락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특히 곡물자급률)이 크게 감소한 주요 원인은 농지면적 감소, 쌀 이외 다른 곡물의 생산 정체, 축산업 성장에 따른 외국산 사료곡물의 수입증가 때문이다. 위와 같이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세계적 식량가격 급등이나 식량공급이 부족한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물량을 비축해 부족량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곡물별 식량자급률 추이(사료용 포함)

(단위: %)

구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1960	100.8	110.4	33.9	18.9	79.3
1970	93.1	106.3	15.4	18.9	86.1
1980	95.1	57.6	4.8	5.9	35.1
1990	108.3	97.4	0.05	1.9	20.1
2000	102.9	46.9	0.1	0.9	6.8
2010	104.5	24.7	0.9	0.9	10.1
2015	101.0	21.9	0.7	0.8	9.4
2020	92.8	36.5	0.5	0.7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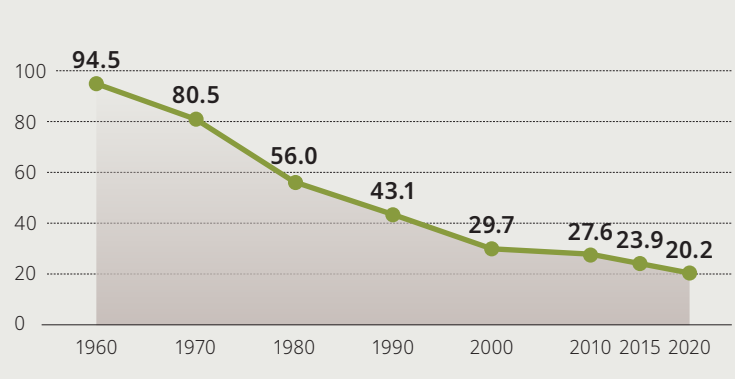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및 양정자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재고율은 글로벌 식량위기에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주요 4대 곡물 재고율은 쌀 23.7%, 밀 16.0%, 콩 8.2%, 옥수수 6.7% 수준으로 쌀을 제외하고는 세계식량기구(FAO) 권장 재고율인 17~18%를 크게 밑돌고 있다.

세계 7위권의 대규모 식량수입국이자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식량안보 확보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식량자급능력 제고 노력과 함께 해외조달 능력 향상이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이다. 국내 생산 여건상 필요로 하는 모든 식량을 완전 자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강화 전략은 크게 '식량자급능력 제고를 위한 국내 생산 및 소비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등 안정적 해외조달시스템 구축', 그리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과적 식량재고 비축제도 운영'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요청된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추이(사료용 포함)

(단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통한 식량자급능력 제고다. 식량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식량의 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과 적절한 수준의 국내 자급 기반을 유지하고, 꾸준히 식량자급 능력을 제고해나가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식량자급 능력이 높을수록 국제 식량위기나 곡물가격 폭등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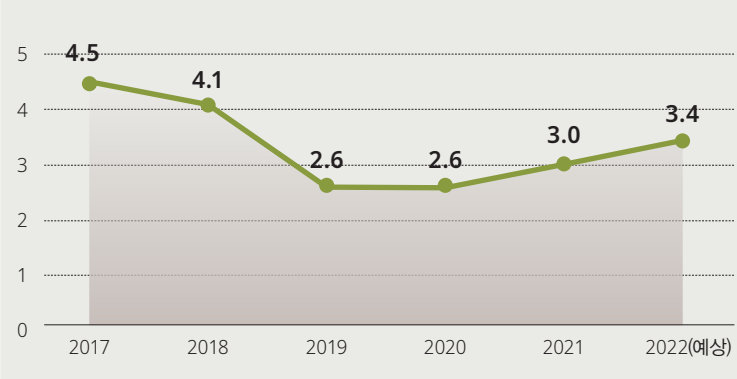
둘째, 효율적인 해외조달시스템 구축이다. 경지면적이 적은 국내 농업 여건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전량 국내에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입이 불가피한 곡물을 해외에서 안정적·효율적으로 조달하고, 공급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은 데 비해 경지면적이 적어 곡물 수요의 상당한 부분을 해외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곡물 재고율
(2020년 기준)

쌀 23.7% 밀 16%
 콩 8.2% 옥수수 6.7%

우리나라 곡물 재고 동향

(단위: 백만 톤)



자료: FAQ,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2022)

따라서 국내 식량자급률 향상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해외조달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해나감으로써 식량안보 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아르헨티나·브라질(옥수수), 우크라이나·캐나다(밀), 미국·브라질·아르헨티나(대두)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공개경쟁 입찰거래 의존도가 높은 현행 곡물 수입방식을 선물거래, 수출국과의 중장기 계약거래 등으로 다각화해 국제 곡물 시장의 불확실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

셋째, 비상 대비 효과적 식량 재고비축제도의 운영이다. 국내 흉작 혹은 해외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곡물별로 국내에 일정한 물량을 비축해 부족량을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단기적인 식량부족 사태에 대비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요 식량의 재고 비축제도의 효과적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쌀 이외에 보리, 밀·귀리·호밀 등의 맥류, 콩을 포함한 두류, 그리고

옥수수 등 사료용 곡물까지 재고 비축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적정 수준의 물량도 비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식량 비축 제도는 쌀 비축 위주이며 밀, 콩 등 주요 식량의 비축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 비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나 정책적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곡물수급 비상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료용 곡물 비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러·우 사태는 작황이나 가격에 의한 기존 곡물수급 위기 상황과는 다른 물류 차질이나 항만 파업 등의 요인에 의해 식량공급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식량공급의 불확실성 증대와 불균형한 국제 식량 수급구조로 인한 식량부족 및 식량가격 급등 가능성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식량수입국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다. 식량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다 강화된 식량안보 체계 구축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정책목표이자 해결과제다. 식량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공급하지 못하거나 식량을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생존 및 안보적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의 식량안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꾸준히 실행해나가는 것이 요청되는 이유다. 앞으로 지속적인 식량자급 능력의 향상 노력과 함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해외조달 능력 제고,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한 효과적 식량비축제도 마련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⁵⁾

글로벌 식량위기와 애그플레이션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 해법 모색

전 세계적으로 식량가격 상승과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이변과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식량위기가 고조되면서 식량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애그플레이션(agflation)'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전 세계의 화두가 된 식량안보 문제와 애그플레이션 현상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대담을 마련했다.

진행 김광균 기자 사진 박충렬



대담자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시스템연구부 연구위원



김세진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토론 제시어

#1 애그플레이션과 식량안보

#2 애그플레이션 전개양상과 시사점

#3 향후 전망과 중장기 대응방안

#1 애그플레이션과 식량안보

김종진 연구위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쌀을 제외한 수입 곡물의 가격이 2배가량 올랐다. 곡물은 그 자체로 소비되기도 하지만 밀가루, 전분당, 식

용유 등 식품 소재와 사료로 1차 가공된 후 축산업, 가공식품 등의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재가공돼 소비된다. 국내 가공식품산업 규모가 상당한 만큼 가공식품산업과 외식 물가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현재 미·중 분쟁, 코로나19, 전쟁 등 복잡한 국제 정세가 곡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수입국이 소수의 곡물 수출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된 상황에서 이상기후와 주요국들의 교역 제한이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세계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서는 작은 충격도 큰 리스크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까지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향후 10년 동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식량안보 문제를 촉발한다. 자국의 식량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규제에 나설 경우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추가적인 가격급등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러·우 사태 이후 현재 27개국이 식량 수출제한 조치에 나섰는데 이는 전 세계 식량의 17%(칼로리 기준)에 달하는 규모다.

자국의 식량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규제에 나설 경우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추가적인 가격급등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러·우 사태 이후 현재 27개국이 식량 수출제한 조치에 나섰는데 이는 전 세계 식량의 17%(칼로리 기준)에 달하는 규모다.

김세진 외국변호사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식량 공급망의 고유한 특징 때문이다. 식량은 필수재인 만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 공급망과 달리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식량 무기화가 대표적이다. 최근 미·중 갈등을 비롯한 냉전·대결 양상이 심화되면서 식량 무기화에

따른 안보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식량 무기화의 전조증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현 정세, 특히 미·중 갈등과 러·우 사태 등으로 인한 세계화 후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 대두 등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농산물 가격의 급등 자체보다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문제의 핵심으로 봐야 한다.

각국의 곡물 수출제한조치와 식량보호 현상의 상관관계를 놓고 보면 후자가 전자를 가속화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도의 밀 수출 금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수출제한조치가 비단 식량안보 문제나 식량가격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공급망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농산물이 팜유, 농기계, 화학물질,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중 갈등을 비롯한 냉전·대결 양상이 강화되면서 식량 무기화에 따른 안보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식량 무기화의 전조증상으로 보인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 급등이 일반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 생산량 감소, 러·우 사태로 인한 식량유통 차질, 경제 제재에 따른 연쇄작용 등의 영향도 크다.

#2 애그플레이션 전개양상과 시사점

김종진 연구위원 국제 곡물 시장은 과거 몇 차례 위기를 경험했다. 1970년대에는 석유 무기화에 이은 식량 무기화 논란으로 식량자급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나 2000년대 이후 농업

경쟁력이 열위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식량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왔다. 그 과정에서 기상이변, 신흥국 식량수요 증가, 세계경제 위기 등과 맞물려 국제 곡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이어지면서 잦은 위기를 초래했다. 국제 곡물가격은 세계 경기, 원자재 가격 등 세계경제 상황과 동조화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상이변과 더불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에 의해 가격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애그플레이션은 특히 저개발 국가의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저개발국가들은 수출제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

“**애그플레이션은 특히 저개발 국가의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이들 국가는 수출제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수입선 다변화, 생산 촉진, 비축 등 공급망 강화에 나설 것이다.**”

WTO 상소기구 제도

WTO 분쟁해결제도는 패널, 상소기구의 2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상소기구는 최종심이다. 당사국 간 분쟁의 '조정' 및 '협상' 기능을 도울 뿐 실질적인 협정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한 GATT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미국이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지속적으로 저지함에 따라 2019년 12월 11일자로 그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시스템연구부 연구위원

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수입선 다변화, 생산 촉진, 비축 등 공급망 강화에 나설 것이다. 다만 최근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 재개와 더불어 유가하락, 세계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단계적으로는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세진 외국변호사 과거 몇 차례 나타났던 애그플레이션은 바이오에너지의 사용량 증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육류 소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냉전, 보호주의, 반자유주의 등 국제정치적 원인이 추가됐다. 냉전 종식 이후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토대에서 만들어진 글로벌 가치사슬이 해체 혹은 재편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지금의 애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자유주의 시장질서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분쟁에 대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WTO 상소기구의 마비로 개별 무역분쟁 사안마다 달리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해외농업 개발을 통해 곡물 확보에 나선다거나 수입

선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세계화 내지 자유주의 질서를 복원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리라고 본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MC12)에서 식량안보 대응 관련 의제를

각료선언으로 채택한 것도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3 향후 전망과 중장기 대응방안

김종진 연구위원 산업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분야는 축산업과 가공식품산업이다. 육류 등 축산물 가격은 입식·출하 시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료가격 변동성을 축산물 가격에 전이시킬 수 없다. 또한 원료가격 인상분을 단기간에 반영할 수 없는 가공식품 및 외식업체도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을 계기로 국제 곡물 조기경보시스템 중심의 국제 곡물 시장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국내 생산·공급 확대, 해외농업 개발, 국가곡물조달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축으로 위기 시 대응수단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이 위기 징후를 탐지하면 단계별 대응에 나서도록 한 체계다. 하지만 수익성, 농업 자원 등의 한계로 국내 곡물자급률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고, 해외농업 개발과 국가곡물조달체계 구축사업 역시 국제 곡물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 2010년대 중반 이후 정책추진 동력이 떨어지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세 가지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김세진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WTO를 중심으로 한 통상 메커니즘의 복원과 기존 규범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지난 20~30년간 확립된 기존 질서를 활용하는 동시에 현재 정세를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취해나가야 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

GATT 제11조는 관세, 세금 및 기타 과징금의 형태로 취해지는 조치 이외에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입·수출에서 수량 제한 시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정지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특별한 예외 사항이 아니라면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김세진 외국변호사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식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 요인

에 비해 훨씬 크고 국내 물가 상승의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다. 또한 국내 식료품과 외식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관련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단기 또는 중장기적 정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농업인이나 식품 및 외식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할당 물량 확대와 같은 수급 안정 지원이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쌀 소비 활성화 및 수급 균형 달성, 곡물 자급률

제고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WTO를 중심으로 한 통상 메커니즘의 복원과 기존 규범들의 적극적인 활용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수출 규제의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ATT) 11조에 따른 수량 제한의 일반적인 폐지라든가 WTO의 농업에 관한 협정 12조의 수출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항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통상분쟁 제기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언제나 열려 있다. 지난 20~30년간 확립된 기존 질서를 활용하는 동시에 현재 정세를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취해나가야 한다. 

세계의 식량안보와 공급망 교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위기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세계 각국이 식량 보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수출제한조치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제한조치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식량의 물량은 전체 수입량의 11.6%가량이나 수출 제한에 의한 국제 식량가격 상승이 수입식량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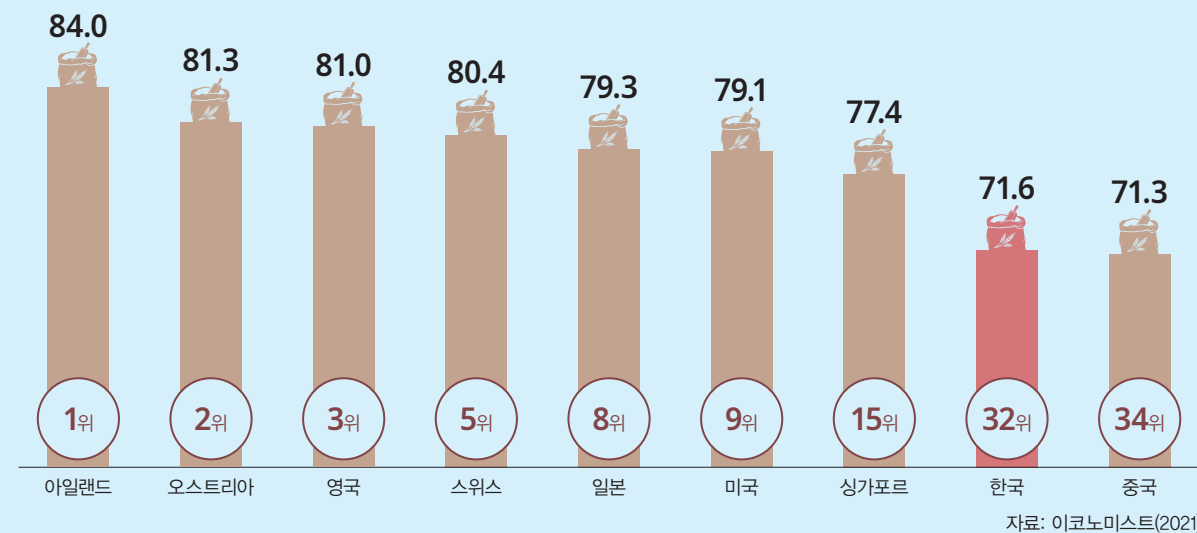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세계식량안보지수

국가별 식량안보 수준을 비교 및 평가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서 한국은 전년 대비 1.8 낮은 71.6을 받아 순위가 29위에서 3계단 하락한 32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계식량안보지수

영국의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2012년부터 매년 113개국의 식량안보 수준을 나타내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Global Food Security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2 식량·비료 관련 수출제한조치(2022년 부과)

러·우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앞다퉈 식량·비료 등에 대해 수출금지, 허가제, 관세조정 등의 형태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어 국제 식량 공급망 교란을 야기하고 있다. 2022년 식량과 비료에 부과된 수출제한조치는 57건에 달하며, 이 중 45건이 러·우 사태 이후 부과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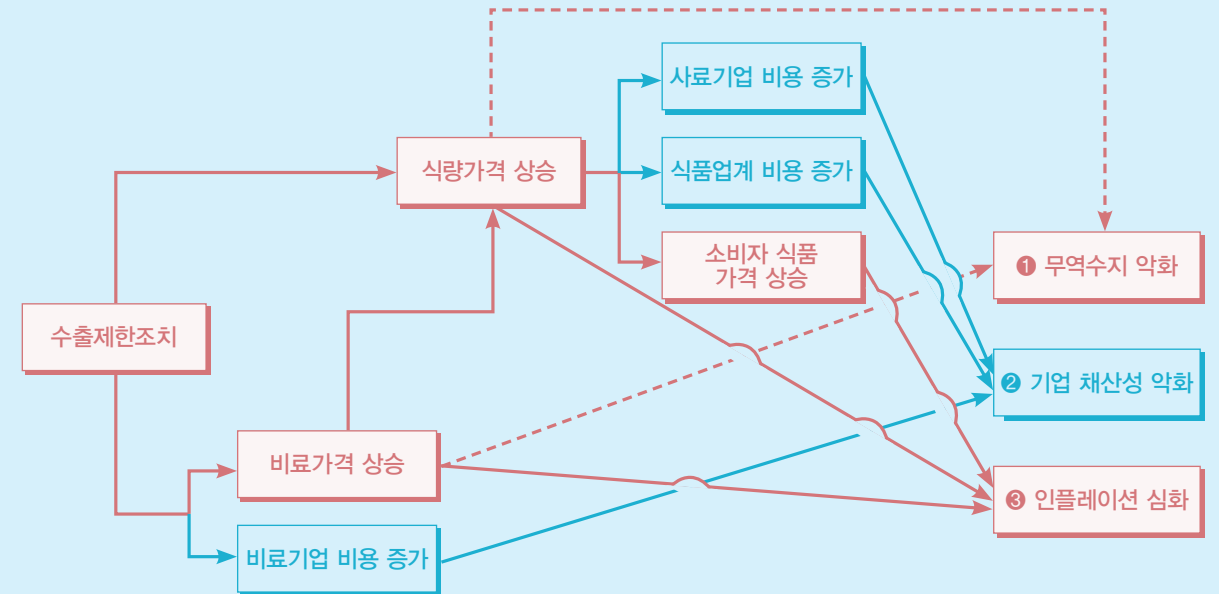
상태	수출금지		수출허가제		관세		소계	
	조치 건수	국가 수	조치 건수	국가 수	조치 건수	국가 수	조치 건수	국가 수
전체	42	21	10	9	5	4	57	34
현재 적용 중	35	20	9	8	5	4	49	32

주: 소계의 국가 수는 중복 포함

자료: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국제식량정책연구소), 2022.5.31 기준

3 식량 공급망 교란의 영향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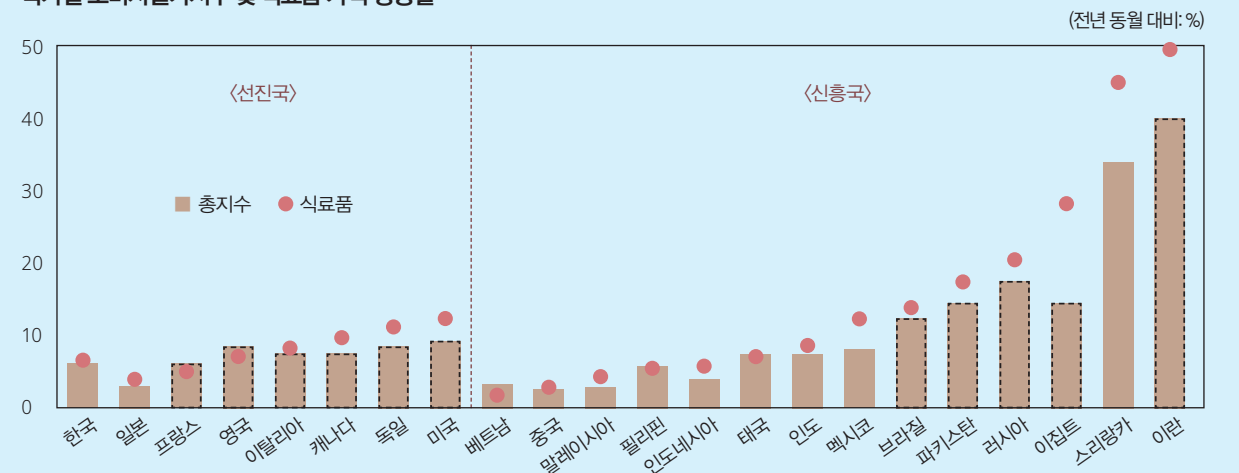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식량 공급망 교란은 무역수지, 기업 채산성 악화 및 인플레이션 심화로 이어진다.



4 애그플레이션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제한은 곡물가격 상승세를 가속하면서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넣고 있다. 곡물가격 상승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의 요인이 된다. 식료품 가격 상승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 수입 비중이 높은 북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러·우 사태 이후 수급차질이 심화된 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에서 물가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뚜렷하다.

국가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식료품 가격 상승률



환경과 경제 사이의 딜레마: ②참치-돌고래 분쟁

지난 호에서는 ‘새우-바다거북 분쟁’ 사례를 통해 국제통상 관점에서 환경과 경제 사이의 딜레마를 확인한 바 있다. 두 가치 간 논쟁은 비단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며 오랜 시간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관련 통상분쟁이 하나일 리 없다. 또 다른 유사 ‘가치충돌의 딜레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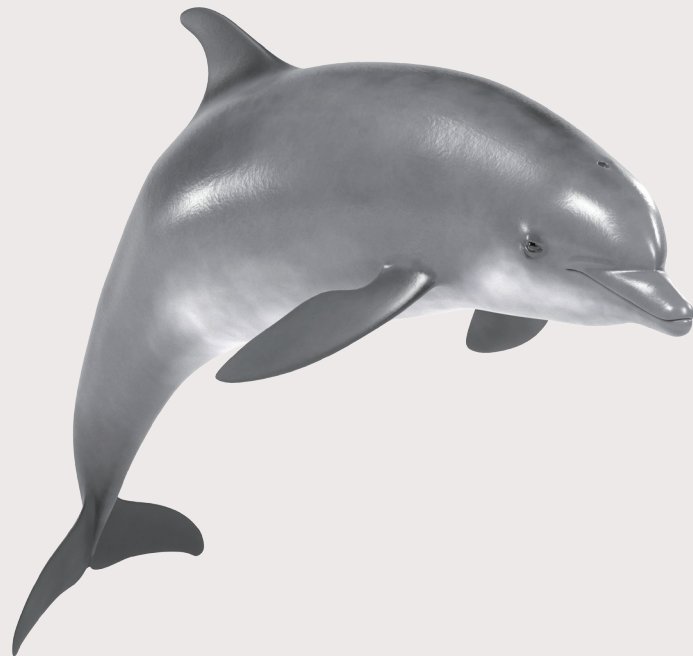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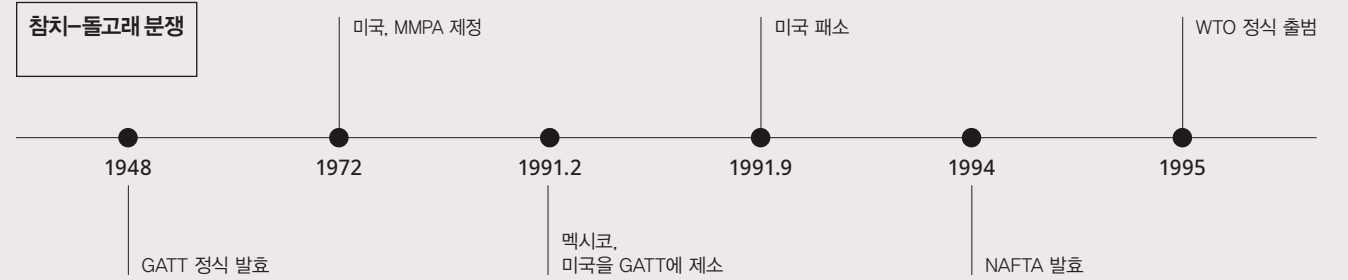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돌고래는 많은 이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해양 포유류다. 특히 높은 지능으로 유명한데 이 때문에 한때 돌고래 쇼 등에 동원되어 세간의 많은 사랑과 비판을 동시에 받기도 했다.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 수족관에 남아 있던 마지막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의 방류가 결정되기도 했다.

참치도 돌고래만큼 친숙한 생선이다. 우리가 회나 조림, 구이 또는 통조림을 이용해 찌개와 김밥 등의 재료로 즐겨 먹을 뿐 아니라 국내 수산물 수출의 최상위권 효자품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색참치가 가진 특수한 성질로 인해 통상 분쟁의 단초가 만들어진 일이 있다. 신기하게도 황색참치는 돌고래와 함께 헤엄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돌고래가 있는 곳에 참치가 있고 참치가 있는 곳에 돌고래가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가 된다. 이 때문에 동태평양의 어부들은 호흡을 위해 수면 위로 멋지게 튀어오르는 돌고래를 먼저 찾았고, 돌고래가 발견되면 대형 건착망을 통해 그 아래에 있는 참치를 대량 어획했다. 문제는 지난 ‘새우-바다거북 분쟁’ 때 새우를 잡다가 바다거북이 희생됐던 것처럼 이번엔 참치잡이 과정에서 돌고래가 혼획(bycatch)되고 희생되는 문제가 적잖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에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1972년에 제정해 돌고래 보호에 나선다. 해당 법은 ①동태평양 참치어선들이 혼획으로 살상할 수 있는 돌고래 개체수를 제한하고 ②미국 어선들의 돌고래 살상률을 기준으로 참치 어획 과정에서

그 이상의 돌고래를 살상하는 국가로부터의 참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 사례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대한 수출 기회가 어떤 이유로든 제한된다는 것은 큰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기에 보통 많은 반발을 사는데 이번엔 멕시코가 그러했다. 멕시코는 미국의 수입 규제가 GATT 제11조(수량제한 철폐)와 제13조(수량제한 무차별 시행)에 위반된다며 미국을 제소했으며 WTO가 출범하기 전의 일로 GATT 패널이 본 분쟁을 담당했다.



자료: 국제법·통상법 해설 포털(<https://disputecase.kr/>)

수량제한보다 공평성과 예외성이 관건

GATT 패널은 본 사안이 수량제한보다는 비차별원칙과 관련된 제3조(내국민대우), 그리고 환경보호 관점에서 제20조(일반적 예외)로 따져볼 문제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참치의 판매, 수송, 유통 등이 멕시코 어선뿐 아니라 미국 어선에 대해서도 살상률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평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패널은 멕시코산이나 미국산 모두 ‘참치’로 ‘동종상품’이 확실한 상황에서 ‘조업방식’을 이유로 멕시코산 참치가 수입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정리하면 ‘제품’ 자체가 동종이면 내국민대우에 입각해 철저히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하며 ‘공정 및

생산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종상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제20조를 인용해 돌고래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의 예외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이 동태평양을 대상으로 MMPA를 입법한 것은 미국의 영토관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수입규제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한 돌고래 보호를 적극 모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환경과 경제 사이의 난제(難題)

이 분쟁은 미국과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과 맞물려 정치적 고려가 더해지면서 일단락됐지만 이후 유사 분쟁이 이어질 정도로 논란이 많았던 사례다. 역시 나중의 일이지만 ‘새우-바다거북 분쟁’에서도 같은 맥락의 판결이 나온 점을 생각하면 GATT가 WTO로 발전하기까지 약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환경과 경제 사이 균형 찾기는 난제로 남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우리 인식도 크게 제고됐다. 비용을 더 치르더라도 환경을 고려한 소비에 적극 참여하는 스마트 컨슈머가 늘어나는 것만 봐도 그러하다. 국제통상체제 역시 이에 따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어업 과정에서의 남획에 대한 최근 WTO의 관심은 그래서 더 특별하다. ^{※상}



자료: 『국제통상분쟁사례이해』(박형래, 도서출판 청람) 및 인터넷 자료.

탄소제로 시대, 기업은 에너지전환 신사업 모색할 기회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 하상선 에코아이 탄소배출권사업본부 전무

탄소중립이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전 세계 경제질서와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화두가 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동안 1,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에코아이 탄소배출권사업본부 하상선 전무가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소연



●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탄소배출권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국내 탄소 배출권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의무업체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할당배출권(allowance)과 의무가 없는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해서 유엔 또는 정부로부터 인증받는 감축실적(credit)이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란 배출권거래제 의무업체 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할당배출권을 매매하거나 감축실적을 거래소 또는 장외에서 거래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의무기업에서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배출권을 매매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고, 컨설팅 기관에서 의무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 에코아이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 투자하고 배출권의 직접 거래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하는 기업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가 대표적입니다. 탄소세가 고정된 세금을 대상 기업에 공통으로 부담시킨다면,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정한 뒤 기업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배출권을 공급해서 감축이 보다 쉬운 기업은 배출량을 줄여서 배출권을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고, 당장 감축이 어려운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등 시장을 활용한 제도입니다. 배출 총량을 규제하기가 수월하고 낮은 비용의 감축사업부터 시행하게 돼 보다 경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유럽, 북미, 호주, 중국, 한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배출권거래제가 수출과 관련이 있나요?

● 최근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 개정안 중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CBAM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느슨한 역외국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검증된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적용대상 품목(철강, 제강, 시멘트, 화학물질, 비료 등)으로 EU에 대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온실가스를 비용효율적으로 감축하는 기술 또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 배출권거래제 동향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오.

●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유럽은 현재 1만1,000여 개 의무업체가 연간 약 13억 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가격도 톤당 12만 원 수준이고 개인의 거래제 참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5년부터 시행한 한국은 의무업체가 700개 남짓 되며 이들의 연간 배출권 거래량은 유럽의 45%, 가격도 4분의 1 수준입니다. 개인 간 거래도 아직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탄소국경세를 검토 중으로 향후 수출 시 탄소배출량에 연계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장기적인 탄소배출권 가격을 고려해서 생산 공정의 저탄소/무탄소 에너지 전환은 물론 높은 배출권 가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 기회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지면에서 못다 한 이야기는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해 온실가스 관리기사, 온실가스 검증심사원(배출권거래제 명세서를 검증하는 업무),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①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능력 필수

배출권 시장의 공급은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고, 수요는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된 산업체들의 산업생산량에 영향을 받으므로 정부의 정책은 물론 경제동향 및 주요 업종의 업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② 어학능력 필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낮고 고탄소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개도국의 감축사업 발굴도 매우 중요하다. 미래에는 국가별 탄소 시장이 연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어학능력도 중요하다.

③ 다양한 업무수행 능력

배출권 거래부터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 배출권 수익 기반의 투자 유치, 배출권을 인정받기 위한 감축사업 등록, 모니터링/검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가 되려면 이렇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현지시간) 백악관의 사우스론(South Lawn)에서 상하원 의원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에 서명했다.

무한경쟁시대, 반도체와 과학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에 전격 서명했다.

이는 그간 국가 간 공정한 경쟁과 자유무역을 기치로 글로벌 산업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의 전통적인 기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조치로, 향후 국가 간 산업정책의 무한경쟁시대 서막을 연 전환기적 사건이다.

특히 미국에 이은 두 번째 반도체산업 강국이자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의 가운데 놓인 우리 입장에서, 이번 입법은 향후 전개될 반도체산업 재편 과정에서 대응전략 모색 시 가장 고려해야 하는 상수(常數)임이 분명하다.

글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본부장 사진 한경DB

반도체와 과학법(이하 반도체법)은 총 3개 법안(division)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하는 법안은 반도체산업에 2026년까지 총 527억 달러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법안인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of 2022)'¹⁾이다. 반도체 지원법의 핵심은 미국 내 반도체산업 육성 및 기반 확충을 위한 직접 보조금 지원,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지원, 그리고 중국 견제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향후 5년간(2022~2026)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립에 총 390억 달러를 직접 보조

¹⁾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에 포함돼 있는 나머지 두 법안(division)은 미국의 첨단기술 및 기초과학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춘 '연구·혁신법(Research and Innovation)'과 '美 헌법재판소(SCOTUS)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Supplemental Appropriations to Address Threats to the SCOTUS)'이다.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of 2022)의 분야별 지원 규모와 내용

구분	지원 규모(2022~2026, 단위: 억 달러)	재원
◆생산시설 건립 보조금	390	CHIPS for America Fund(상무부)
★ 성숙공정(mature technology nodes) 보조금 → 조립, 테스트, 패키징	20	
◆연구개발(R&D)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건립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지원	110	CHIPS for America Defense Fund(국방부)
◆국방(군수)·정보용 반도체 생산시설 지원	20	
◆첨단 통신 공급망 및 반도체 공급망의 국제 공조	5	CHIPS for America International Security and Innovation Fund(상무부 및 국방부)
◆인력 양성 및 교육	2	CHIPS for America Workforce and Education Fund

자료: 경희권(2022)

할 수 있는데, 이로써 미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 설립에 연방정부가 대규모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확보됐다. 또한 이 법을 통해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총 110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설립,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고도의 안전성 담보가 요구되는 국방·정보 관련 반도체의 생산 지원을 위해 20억 달러의 예산도 배정했다. 그리고 첨단 통신 공급망 및 반도체 공급망의 국제 공조를 위해 5억 달러, 반도체 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해서도 2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앞으로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을 통한 총 세제지원 규모는 10년간 약 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미국 측은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비용 아시아 수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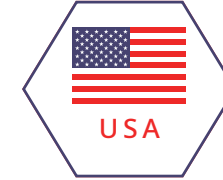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은 결국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아시아 국가 수준으로 낮춰서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자국 내에 갖추겠다는 미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이 법안에는 가장 논쟁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바로 중국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는, 소위 말하는 가드레일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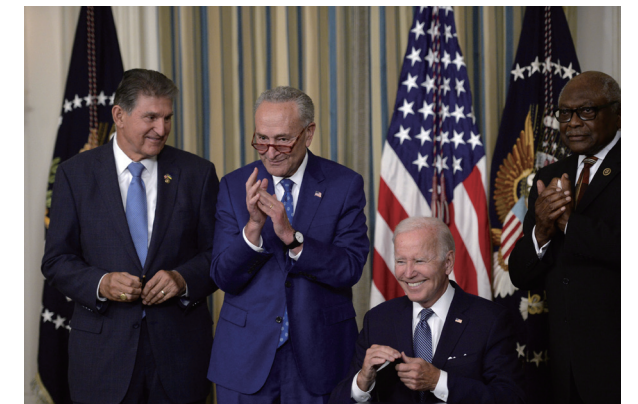
이다. 이 법은 기업이 미국 내에 단행한 반도체 투자(생산시설 및 장비)에 대해 미 연방정부로부터 인센티브(보조금 및 세제 지원)를 받을 경우, 중국 및 해외우려국가(foreign country of concern)에 반도체 투자(신규, 증설, 장비 도입 등)를 10년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28나노미터(nm) 이상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성숙(legacy) 반도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첨단 반도체 경쟁이 14nm 이하의 미세공정에서 펼쳐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안은 사실상 앞으로 중국 내에 의미 있는 반도체 분야 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워싱턴 조야(朝野)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이 반도체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얼마만큼 우려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동북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시설, 특히 대만에 집중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실재(實在)하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입법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간 경쟁이 극심하게 펼쳐지고 있는 워싱턴DC에서 이번 반도체법이 초당적인 컨센서스를 토대로 전례 없이 신속하게 입법이 완료됐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현재 자국 기업의 7nm 이하 첨단 반도체 양산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동맹국이기는 하나 경쟁기업이라 할 수 있는 TSMC, 삼성을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자국 내로 끌어들이는 고육책을 쓴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통상을 이끄는 사람들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

이번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 제정의 일등 공신은 현재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다. 미국 뉴욕주 상원의 원인 척 슈머는 뉴욕주에서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다선으로 두루 거친 정치 거물로서 2017년부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척 슈머는 2021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반도체 진흥 프로그램이었던 'CHIPS for America Act'부터 시작해서 2021년 6월 미국의 첨단산업 육성과 초강력 법안인 '미국 혁신 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의 상원 통과를 주도했다. 척 슈머의 첨단산업 육성 의지와 중국에 대한 우려는 '미국 혁신경쟁법'의 상원 표결 전 그의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중국이 우리를 뛰어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과학과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우리가 뭔가 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전했다. '미국 혁신경쟁법'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 토드 영 상원의원(인디애나주)과 함께 대표 발의한 'Endless Frontiers Act'를 기본법안으로 삼고 'Strategic Competition Act' 및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등 다수 법안이 통합된 법안이다. 이후 미 하원에서 낸시 펠로시 의장 주도로 상원의 '미국 혁신경쟁법'과 유사한 취지의 '미국 경쟁법(The



지난 8월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다이닝룸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을 때 배석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

America COMPETES Act of 2022)'이 2022년 2월에 통과되면서 두 법안을 병합하는 작업이 2022년 상반기에 진행됐다. 그러나 병합 법안의 일부 내용을 놓고 민주·공화 간 이견으로 인해 지지 부진하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우선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화당과 논의를 신속하게 진척시키면서 527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 패키지가 담긴 '반도체와 과학법'이 탄생하게 됐다. ■

척 슈머(Chuck Schumer)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중 간 반도체 줄타기 난항 예상

이번 반도체법이 우리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하다. 이번 입법으로 그동안 선언적인 수준에서 오고 갔던 미·중 간 반도체 줄타기는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든 전략이 됐다. 가장 논쟁적인 부분인 중국 내 시설투자 금지 조항, 소위 말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미국 반도체협회와 미국 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함된 것은 워싱턴 조야의 반도체와 중국에 대한 단호한 시각을 엿보게 한다. 39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 보조금은 기업 입장에서 외면하기 힘든 인센티브다. 더군다나 미국은 실리콘 기반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반도체 설계자산(IP),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툴, 그리고 핵심 제조장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 말은 미국이 맘만 먹으면 반도체 제조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다. 아무리 제조 경쟁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이들을 틀어막으면 제조가 어렵다. 중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보조금과 제조기술 획득을 위한 저돌적인 계획도 이 병목이 막히면 공염불이다. 미국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도체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아무리 제조 기술이 좋아도 신규 장비 및 소프트웨어(SW)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바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한번 빼앗긴 경쟁력을 되찾아오는 것은 현대 반도체 전쟁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우리는 일본의 사례에서 이런 것을 보아왔다. 현재 우리 반도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 내 사업장은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신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반입이 이제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제재가 극자외선(EUV) 장비, 14nm 이하 장비 등 첨단 반도체 장비에만 국한돼 있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제재 기준점을 28nm 수준으로 높여 놓으면서 사실상 중국 사업장 내 신규 장비 반입은 불가능해졌다. 이 말은 중국

사업장에서는 앞으로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중국 내 수요가 있는 성숙공정 제품 수요가 있으나 팹(fab)의 가동 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반도체 무한경쟁시대의 전략적 포지션

반도체의 무한경쟁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반도체 생산설비의 글로벌 배치와 글로벌 반도체산업 내에서 우리의 전략적 포지션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 내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반도체 협력체지만 경쟁국이기도 한 미국, 대만, 일본과의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지켜내는 것이다. 이 경쟁에서 우위를 상실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을 놓치는 것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에서 손을 잡았다. 이들은 IP, 소재, 장비, EDA, 그리고 제품을 발주하는 수요기업을 가진 나라다. 우리 정부와 업계가 바짝 긴장해야 하는 이유다.

반도체는 '21세기 편자(horseshoe)의 끝'이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산업이다. 우리가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현재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데에는 상당 부분 반도체의 역할이 크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대중국 제재를 담은 가드레일 규정의 세부 규제안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은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이제 생산 거점의 글로벌 배치를 반도체의 글로벌 산업 지형 변화를 고려해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틀 내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할 핵심 경쟁원천 부분을 국내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야 한다. 기업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확보한 핵심 경쟁원천과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의 뒷받침으로 만든 탄탄한 반도체산업 생태계의 시너지가 결국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최강자, K9

K9 자주포는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다. 한국에서 운용되는 것은 물론, 튀르키예, 인도 등 해외 8개국과 수출 계약을 맺었다.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군 운용 K9 자주포를 포함해 1,700여 문이 운용 중으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폴란드로 추가 수출이 완료되면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K9 자주포

차량이나 장갑차에 고정해 만든 포를 자주포라고 한다. K9은 10년에 걸쳐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한 첫 국산 자주포다. 포탑에는 8m 길이의 긴 포신을 달았다. 여기에서 발사된 포탄은 최대 40km까지 날아간다. 표적범위 안 명중률은 98% 수준이다.

K9 자주포 주요 성능과 제원

전투 중량	47톤
길이/폭/높이	12m/3.5m/3.4m
최고속도/항속거리	시속 67km/360km
엔진 출력	1,000마력
주무장/부무장	155mm(52구경장) 강선포/12.7mm K6 기관총
최대 사거리	40km
발사 속도	급속 3발/15초, 최대 6발/분, 지속 2발/분
초탄 발사 소요시간	정지 시 30초 이내, 기동 시 60초 이내
탄약 적재량	48발

자료: 한화디펜스



K9 자주포 세계점유율 1위

K9 자주포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9개국에서 사용 중인데,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이 주력 자주포로 운용 중이다. 이 외에 인도, 호주, 이집트, 핀란드도 한국의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나라다.



튀르키예(2001년)	300문
폴란드(2014년)	120문
인도(2017년)	100문
핀란드(2017년)	48문
노르웨이(2017년)	24문
에스토니아(2018년)	12문
호주(2021년)	30문
이집트(2022년)	200문
폴란드(2022년)	670문

※해당 연도는 계약연도

2022년 폴란드 K9 670문 추가

2022년 하반기에는 폴란드가 K9을 추가 주문했다. K9 자주포, 155mm 탄약류 등을 공급하는 3조2,000억 원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K9 수출계약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52% 수준인 K9 자주포의 글로벌 자주포 수출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9 자주포의 경쟁력

한국 K9의 우수한 성능은 세계 최상급의 무기 생산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제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특히 약조건의 기후와 지형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2014년 노르웨이 수출 당시 세계시장에서 전통의 강호로 인식되던 독일의 판처하우비처(PzH2000)와 한국의 K9이 성능 경쟁을 벌였다. 눈 쌓인 노르웨이 산악에서 기동 및 사격 시험을 했는데 독일 제품은 고장 났으나 K9은 생생하게 작동해 입찰에 성공했다.



사막에서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환경에서 운용 입증



남북 대치 상황에서
1,200문이 실전 운용 중



현대화



높은 성능 및 정비 신뢰도

K9 자주포의 미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군비 증강 가속화로
K9 자주포 관심 급증

NATO 회원국(튀르키예,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공급계약에 이어
NATO 동맹의 핵심인 영국과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도 도전장

- 2023년부터 시작되는 영국 기동화력체계(MFP; Mobile Fires Platform)
- 미국 사거리연장 자주포 사업(ERCA; Extended Range Cannon Artillery)

장비 제작부터 제어시스템 개발까지 물류의 모든 것

(주)태성시스템

2016년부터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업계에 뛰어든 (주)태성시스템은 화물 자동분류시스템을 직접 설계·제작·설치 및 시운전하는 전문업체다. 장비 제작부터 제어시스템 개발까지 물류의 모든 것을 다루는 (주)태성시스템의 실력은 해외에서 먼저 알아봤다. 현재 14개국에 넘는 나라에 휠소터를 수출하고 EPC사업을 통해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도 넓혀가는 중이다.

글 이선민 기자 사진 박충렬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로 인한 물류시스템이 각광받으며 화물자동분류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16년 설립한 (주)태성시스템은 화물 고속분류기를 직접 설계 및 제조하는 EPC(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engineering), 부품·소재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사업을 중심으로 창업 3년 만에 '백만불 수출의탑'을 수상하는 등 해외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휠소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다뤘습니다. 장비를 제작하기에는 규모가 되지 않아서 소프트웨어부터 접근한 겁니다. 기존 휠소터를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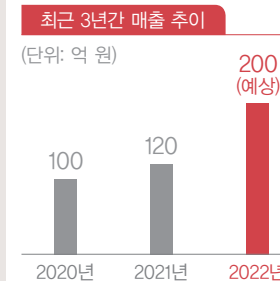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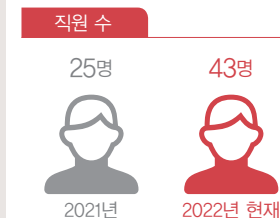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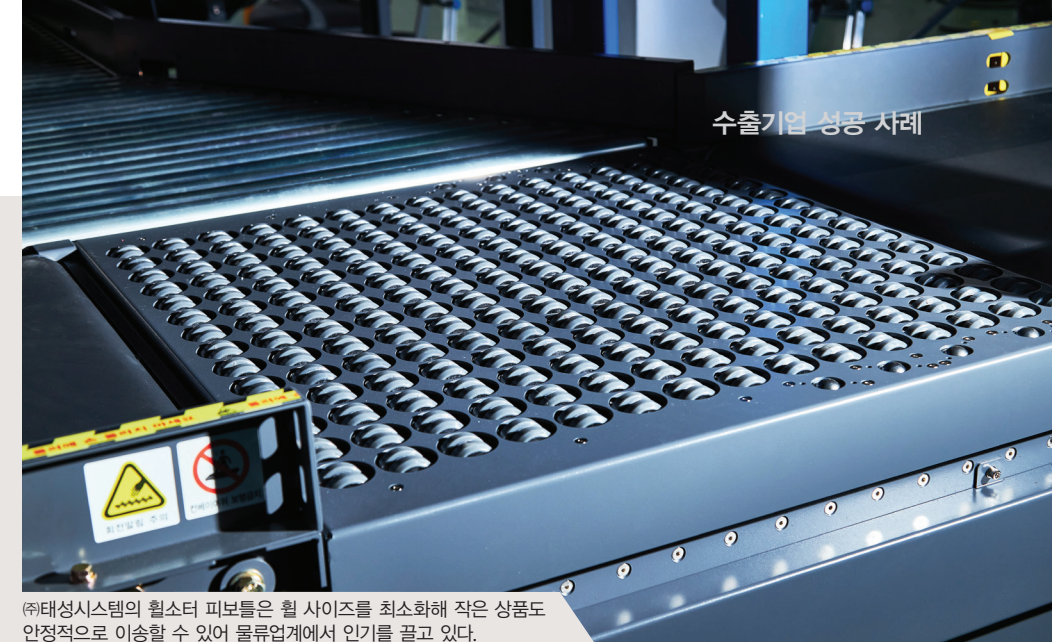
(주)태성시스템 역사

- 2016 태성시스템 설립
- 2017 고속 휠소터 제어시스템 수출 시작
- 2019 CJ대한통운 휠소터시스템 턴키 공급 및 백만불 수출의탑 수상
- 2020 우정사업본부 및 쿠팡 물류자동화시스템 턴키 공급
- 2021 SSG.COM 등 틸트 트레이소터 시스템 공급

한국무역진흥공사(한국무역진흥공사)

수출바우처로 홈페이지 리뉴얼하며 해외영업 활력 제고

(주)태성시스템이 코로나19로 해외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이 코트라의 수출바우처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보고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겨냥한 홈페이지 리뉴얼이 절실했다. 이때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카탈로그와 외국어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또한 국제전시회에 참가해 현지 바이어와 매칭 상담으로 거래처 확보에도 나섰다.



(주)태성시스템의 휠소터 피보틀은 휠 사이즈를 최소화해 작은 상품도 안정적으로 이송할 수 있어 물류업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있을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 겁니다." 김주원 본부장은 사업 초기 대형 택배사로 부터 (주)태성시스템의 제어 프로그램을 공급해달라고 요청받은 것이 사업 규모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허브터미널에서 분류한 상품을 서브터미널로 보내면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내는 작업을 담당했던 것. 무게나 크기별로 분류하고 이것을 또 각 지역으로 보내는 분류 자동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사업 이후 틸트 트레이 소터인 풀필리오, 휠소터인 피보틀, 플랩 소터인 스팅 시리즈 등 다양한 소터를 개발 제작할 수 있었고 EPC사업도 가능해졌다. 특히 (주)태성시스템의 휠소터 피보틀은 휠 사이즈를 최소화해 작은 상품도 안정적으로 이송이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쉬우며 (주)태성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휠소터 전용 시스템이 있어서 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국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주)태성시스템은 CJ대한통운, GS리테일, 쿠팡, SSG.COM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영국, 튀르키예, 프랑스, 남아공 등 해외 14개국 이상과도 협업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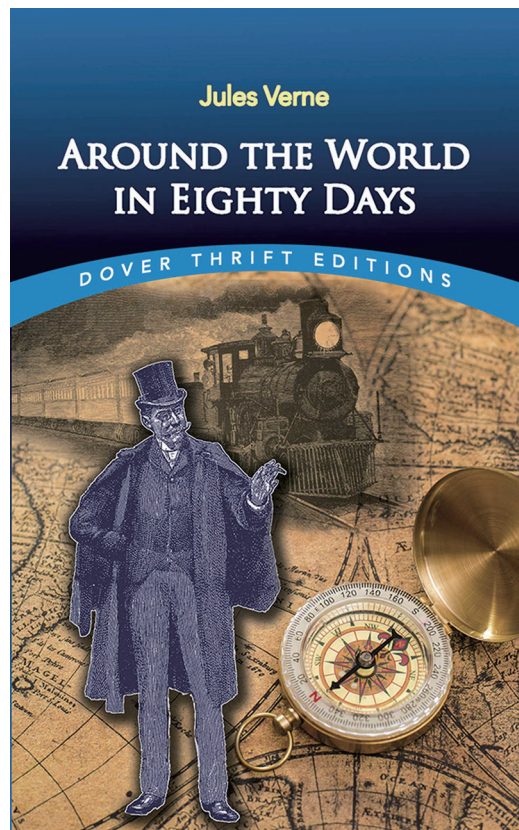
해외전시회 참가로 유럽 시장 가능성 열어

(주)태성시스템은 먼저 해외에서 시장을 발굴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할 때는 기존 실적이 중요한데 신생 기업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실적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튜브로 작업 동영상상을 올렸는데 해외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마침 싱가포르에 있는 시스템 인터그레이터(시스템 설계, 최적의 하드웨어 선정에서 발주·조달,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보수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인연을 맺게 돼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김 본부장은 동남아 진출과 함께 코트라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2018년 독일 하노버박람회에도 참가했다고 말했다. (주)태성시스템은 휠소터 등 장비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았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입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다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하노버박람회의 인연이 유럽 수출의 계기로 이어졌다. 해외에서 인정받은 실력을 국내에서도 펼쳐가겠다는 (주)태성시스템의 활약이 기대된다. 

시계의 발명, 그리고 인류의 경제활동 포그 씨가 시간에 집착한 이유는?

13세기 말 ‘시계’라는 기계장치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시계는 ‘대충’ 예배시간을 알리는 데 활용됐을 뿐 사람들은 정확한 시간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다. 시계가 인간의 삶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였다. 사람들은 시계가 만든 규율에 맞추어 살기 시작하면서 시간에 집착하게 됐고 ‘시간이 돈’인 세상을 맞이하게 됐다. <80일간의 세계일주> 주인공 포그 씨가 시간에 집착하는 인물로 묘사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됐다.

글 김동욱 한국경제신문 중기과학부 부장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는 근대의 산물이었다. 당연히 초기에는 ‘차차품’ 취급을 받았다. 1797년 영국에선 모든 시계에 세금이 부과됐는데 당시 세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조세 신고서는 영국 사회에 시계가 얼마나 보급돼 있었는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피블스란 조그만 마을의 조세 신고서에는 “읍내에는

시계(clock·과중시계나 탁상시계)가 15개, 은제 회중시계가 5개 있으며 금제 회중시계는 없다. 피블스 읍내와 시골, 교구를 통틀어 시계는 105개, 은제 회중시계는 112개, 금제 회중시계는 35개 있다”는 식으로 꼼꼼하게 세금부과를 위한 기록을 남겨두었다.

‘표준’을 지배한 영국

14~15세기까지만 해도 개인이 시계를 소유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었다. 기계식 시계가 매우 비싸서 공공부문에서 주로 활용했다. 시계가 인간의 삶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이며 배경이 된 장소는 영국이다.

19세기 후반 세계 전역을 지배하던 ‘대영제국’은 세계 각지의 영토뿐 아니라 각종 주요 표준까지 지배했다. 자연스럽게 영국이 세계 측량단위의 기점

◀ 1873년 프랑스 출신 소설가 쥘 베른이 쓴 모험소설 <80일간의 세계일주>. 편집증적으로 시간에 집착하는 인물로 묘사된 주인공 포그는 시계 발명 이후의 사회상을 잘 반영한 인물이다.



역할도 병행했다. 1884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자오선 콘퍼런스에서 런던 근교 그리니치를 지나는 자오선을 세계 경도의 기준점인 ‘0’으로 삼았다(본초자오선). 각국의 지도 제작자들은 자국의 수도를 세계 중심에 놓던 습관을 버리고 경도에 일련번호를 매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동의해야만 했다. 영국을 기점으로 하는 지리적 ‘개념’들도 등장했다. 아시아 대륙은 대영제국과의 거리에 따라 근동(近東·the Near East)과 중동(中東·the Middle East), 극동(極東·the Far East)으로 구분됐다. 그리고 이 같은 영국 중심의 기준은 시간 측정에도 적용됐다. 영국 그리니치의 시간이 전 세계 시간을 기록하는 원점(GMT:그리니치평균시)이 됐고,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사실 서양에선 13세기 말 ‘시계’라는 기계장치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시계는 ‘대충’ 교회의 예배시간을 알리는 데 활용됐을 따름이다. 사람들은 자연의 주기에 따른 유동적인 시간기준에 의거해 살아갔다. 19세기 중반까지 마을마다 독자적인 시간개념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별과 태양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 하지만 이후 시계 보급이 확대되면서 시간을 균질적으로 나누게 됐다. 낮이 긴 여름이나 낮이 짧은 겨울이나 동일한 시간대로 구분되면서 ‘전국’의 시간을 통일하고 그 기준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시간을 금으로 만든 시계

19세기 이전에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기에 시계에 분침이 없었다. 그러나 188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는 초 단위까지 정확히 맞출 것을 요구할 정도로 급변했다. 경영자와 관리인, 노동자는 점점 더 시계와 호각으로 규율되는 노동일과에 묶여버렸다. 시간엄수가 장려됐고, 늦으면 벌금이나 해고로 벌을 받아야 했다. 시간은 절약해야 하는 대상이 됐고, ‘시간이 돈’인 세상이 됐다. 쥘 베른의 소설 <80일간의 세계일주> 주인공으로 편집증적으로 시간에 집착하는 인물로 묘사된 포그 씨는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났다. 이런 상황을 가속화한 것은 철도의 등장이었다. 1845~1847년에는 626개 회사가 승인받은 철도건설 총연장이 1만5,340km에 달했다.

철도 붐을 타고 기차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거리 개념은 점점 더 좁혀졌고, 전체 시간망을 통일하는 것도 시급해졌다. 철도회사들은 런던 시간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그리고 철길을 따라 늘어선 전신을 이용해서 전국에 시간을 알렸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영국의 사례를 따라갔지만 한동안은 세계 각지의 시간을 맞추는 데 혼란이 이어졌다. 영토가 너무 넓었던 미국은 자국만의 시간대를 따로 정해버렸는데 버펄로역에는 시간이 각각 다른 시계가 3개 있었고, 피츠버그역에는 6개나 있었다.

이런 상황의 해답은 전신망이 제공했다. 국제적 전신망이 확립되면서 각 국가는 시간 측정에 관한 기준 확립에 합의했다. 마침내 전 세계의 시계가 동일한 리듬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다. 여기서도 세계 시간의 기점은 영국 그리니치가 됐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시간 측정의 기준까지 자연스럽게 장악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은 시간관념의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시계기술의 발전과 걸음을 같이했다. ■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으려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하세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는 미국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된 국제표준이다.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이 제도를 채택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AEO 제도를 필수 도입해야 하며, AEO 기업에 수출입 통관 관련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AEO의 혜택과 신청과정, 절차 등을 알아본다.



#AEO의 개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한다. AEO는 2005년 6월 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이며, 화물 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한다.



#AEO의 혜택

AEO 업체들에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 부여와 함께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 업체들은 협정 체결국에서도 검사비용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AEO 공인신청

AEO 공인 대상업체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 9개 업종이다.

AEO 공인신청은 공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①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②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법인등기부등본 ⑤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⑥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⑦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보유한 경우에 한함)

AEO 공인 대상업체: 수출업자 ▷ 관세사 ▷ 화물운송주선업자 ▷ 보세운송업자 ▷ 보세구역 운영인 ▷ 하역업자 ▷ 항공사 ▷ 선박회사 ▷ 하역업자 ▷ 보세구역운영인 ▷ 관세사 ▷ 보세운송업자 ▷ 수입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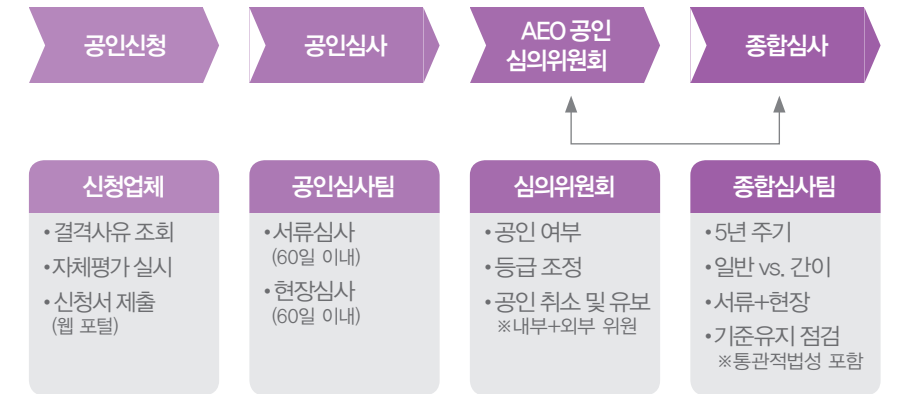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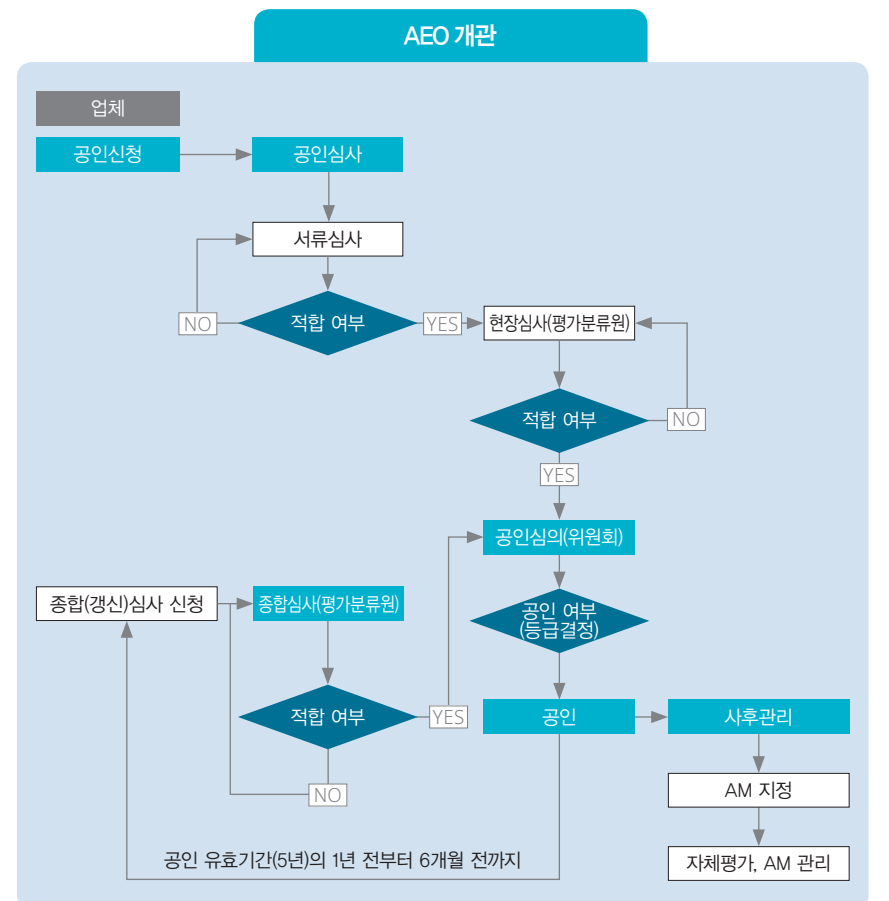
#AEO 공인심사절차

관세청장은 신청한 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안전관리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 공인심사위원회에서 공인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의 AEO 추진 현황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AEO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어서 뉴질랜드 2004년, 일본 2007년, 유럽연합(EU)과 중국은 2008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세계 각국은 이 제도를 자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9·11 테러의 영향을 받은 미국은 수입 공급망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이고, 일본과 뉴질랜드 등은 수출기업의 지원을 목표로 하며, 우리나라와 중국, EU 등은 수입 화물의 신고 정확도 제고와 수출기업 지원 모두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 EU, 중국 등 전 세계 77개국이 도입한 AEO 제도는 수출입 및 물류업계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국제무역환경 변화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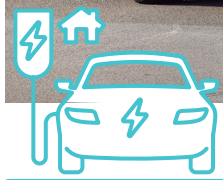
전기차 중흥 시대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전기차는 약 5.8% 증가했으며 점유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약 670만 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중국에서 판매됐다. 올해 판매 대수는 950만 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2~3년 내 2,0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전기차 시장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글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가장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 중인 유럽

유럽연합(EU)은 탄소배출과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제도적 강화 의지가 가장 강한 지역이다. 자동차 시장도 한때 열풍을 일으킨 '클린 디젤'의 명성을 버리고 가장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 중이다. 지난해 EU의 신차 시장 규모는 약 1,100만 대였으며 이 중 전기차가 92만 대 판매돼 점유율 8.3%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 다음으로 큰 규모다. 독일의 BMW 등 몇몇 제작사는 “내연기관차는 여전히 세계시장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기차라는 대세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노르웨이는 2022년 1월 기준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자동차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을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내연기관에 부과하는 세금을 전기차엔 면제하는 등 세제감면 조치를 통해 전기차의 판매 및 보급을 가속화했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손꼽힌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4개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큰 까닭이다. 특히 BMW는 아직 전기차 올인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 이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전기차, 수소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이 앞으로 상당기간 공존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내연기관차 중심의 프리미엄 브랜드



독일의 폭스바겐이 출시한 소형 전기차 ID.3.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등도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페라리는 2010년대 초반 해도 ‘전기차를 안 만든다’고 공개적으로 단언했지만 최근 전동화 전환을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럽은 전기차 대중화가 활성화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다. 독일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기로 했으며 영국은 이미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종료했다. 전기차 천국으로 불리던 노르웨이도 전기차에 주던 여러 혜택을 줄이는 중이다.



미국 테슬라의 중형 SUV 전기차 MODEL Y.



미국 내 생산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하는 미국

미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3.3%로 낮은 편이다. 물론 일본과 같이 하이브리드차를 기반으로 하는 내연기관차 중심의 시장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전기차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10.4%), EU(8.3%), 한국(5.9%)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막힘없이 달리던 전기차 시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으로 제동이 걸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고, 배터리 자재 혹은 부품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조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4년부터는 중국의 배터리 부품, 2025년부터는 중국 배터리 광물의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배터리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부담을 가장 크게 떠안은 국가가 됐다. 게다가 최근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리스트에도 국내 기업이 빠지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부상했다.



2022년 3월 기준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 1위 기업 BYD가 출시한 전기차 ‘한’.



가장 큰 전기차 시장, 자국 브랜드가 휩쓸고 있는 중국

중국을 전 세계에서 순수 전기차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지만 전기차 수입은 2016년 이후 대폭 감소했다. 그동안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각축장으로 인식됐지만 전기차 시장에선 중국 브랜드들이 자국 시장을 휩쓸고 있다. 중국여객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신에너지차(전기차·충전식 하이브리드·수소차 등) 부문에서 판매량 10위 안에 든 유일한 수입차는 테슬라(3위)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비야디(BYD), 상하이우링, 샤오펑 등 중국 브랜드다. 중국은 내연기관 차량의 전통적 강국인 유럽, 미국, 일본 등을 단기간에 추월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자동차 발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전기차 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다. 중국은 배터리 원자재 보유 국가이고 각종 배터리 중간제품도 주도하는 나라다. 향후 높아진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기차 공략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8]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는 666만 대로, 이 가운데 절반인 332만8,301대(50%)가 중국에서 판매됐다. 2위는 69만4,817대(10.4%)를 판 독일이, 3위는 66만9,931대(10.1%)를 판 미국이 차지했다.



2021 주요국 전기차 판매 순위 톱 10 (단위: 만 대)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원 부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보르네오섬에 위치한 동말레이시아와 말레이반도에 위치한 서말레이시아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유, 천연가스, 팜오일, 천연고무, 주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다. 우리나라와는 2019년부터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다자간 FTA 체결국이다.

글 조승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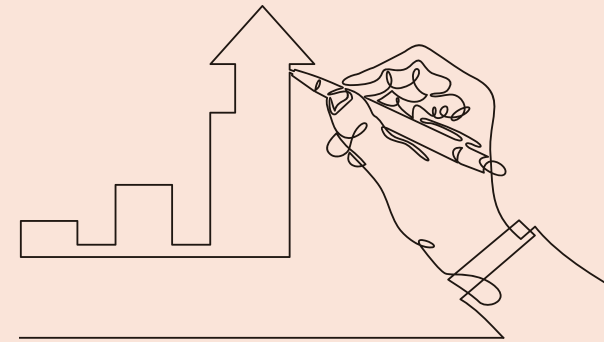
코로나19 발생 이전 경제수준 회복

말레이시아는 2021년 경제성장률 3.1%를 기록하며 명목 국내 총생산(GDP) 3,727억 달러, 1인당 GDP 1만1,371달러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2022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8.9% 성장했다. 이러한 경제회복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2022년 4월), 국내 노동시장 회복, 전기 및 전자 품목의 수출확대에 기인한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추세 속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 5월과 7월 각각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으며, 6월부터 인플레이션 대책위원회(Special Task Force on Jihad Against Inflation)를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닭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자 말레이시아는 국내 닭고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닭고기 수출을 중단했다. 이는 말레이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싱가포르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말레이시아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로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귀환해 현재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입국 허가에 속도를 가하며, 산업계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3.1%**
(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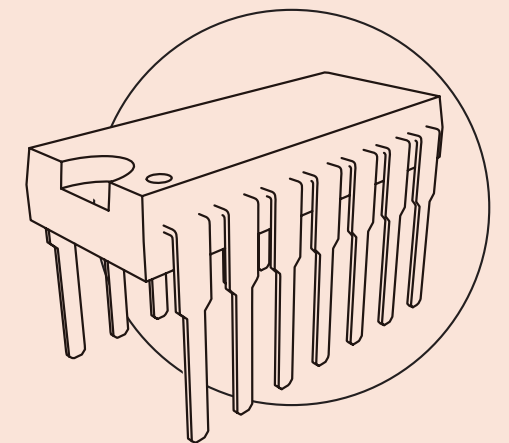
IMD 국가경쟁력
아세안 **2**위
(2022년 기준)

말레이계 우대 정책, 부미푸트라 실시

202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에 이어 아세안 2위(전체 32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인 인텔, AMD와 도요타, 혼다와 같은 자동차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투자하고 있다. 2021년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109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투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말레이시아 투자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0점 만점에 평균 79점 획득). 말레이시아는 1970년대부터 말레이계 우대 정책인 부미푸트라(Bumiputera)를 경제,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부미푸트라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부미푸트라 정책으로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부미푸트라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부미푸트라 말레이시아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한다.

한·아세안 FTA와 RCEP 통해 다자간 FTA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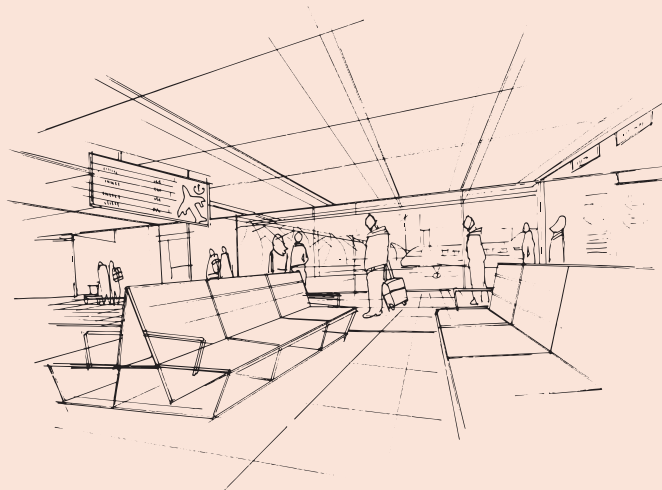
2021년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은 101억1,000만 달러, 수입은 104억6,000만 달러다. 양국 교역액이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13대 교역국(아세안 국가 중 3위)이 됐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 휘발유, 합성고무이며, 수입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 천연가스, 중유다. 최근 양국은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 그린·블루 수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1조 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을 수주했으며, 디지털 정부 및 스마트시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2년 7월에는 8,900억 원 규모의 가스플랜트 사업을 한국 기업이 수주하는 등 건설부문 협력은 지속되고 있다. 2019년 6월 시작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말레이시아와 다자간 FTA를 체결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 말레이시아 교역 규모
수출 **101억1,000만 달러**
수입 **104억6,000만 달러**
(2021년 기준)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총리 사퇴 등 홍역 치러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의 약 14.5%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2021년 9월과 2022년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하루 확진자가 각각 2만 2,000명과 3만2,000명에 육박했다. 2022년 3분기에는 하루 확진자가 2,500~5,300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전체 인구의 약 85%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정부가 수차례 이동제한조치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대한 시위가 발생했고, 2021년 8월 무히딘 야신 당시 총리가 사퇴하게 됐다. 석 달 뒤인 11월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 육상으로 여행안전권역(VTL: Vaccinated Travel Lane) 제도를 시행하며 2020년 3월 이후 20개월 만에 국경을 개방했다. 주변 국인 캄보디아, 태국과 VTL을 순차적으로 도입했고, 지난 4월 엔데믹 체제로 전환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실내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4월 엔데믹 체제 전환

4개국 식민통치 역사를 거쳐 건국

15세기 초 말라카 왕국이 성립된 이후 1511년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영국이 차례로 말라카 왕국을 점령했다. 1874년 영국 보호령이 시작되며 영국의 말레이반도에 대한 본격적인 지배가 시작됐다. 1941년부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이 말레이시아를 점령했다. 제국주의 시대, 말레이시아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 4개 국가의 식민통치를 경험하게 됐다. 1963년 싱가포르와 보르네오 섬의 사바와 사라왁이 참여하는 말레이시아(Malaysia)가 성립됐으나 1965년 8월 복잡한 인종 간 갈등이 원인이 되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했다. 말레이시아는 때때로 민족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다민족 다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말라카해협의 역사 도시인 말라카와 조지타운은 말레이시아의 역사를 잘 함축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말레이, 중국, 인도 등 3개 유럽 식민국가의 건축, 도시형태, 기술, 예술이 두 도시에 잘 반영돼 있으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말레이반도 남서부의 항구도시 '말라카와 조지타운'. 16세기 들어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일본 등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남겼다.



현지 인터뷰

안효찬 코트라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과장

Q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A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로 이슬람, 불교, 힌두 등 다양한 종교를 숭배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부미푸트라(말레이시아 이슬람계) 인구가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지 바이어와의 만남에서 이들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 또한 이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미팅 시 사실과 정보를 교환하기보다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이슬람 신도의 경우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음식, 식사 접대보다는 선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식사 접대 시 메뉴는 현지인이 가장 선호하는 닭고기 요리가 무난하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수한 투자지원 정책과 인센티브를 갖춘 매력적인 투자처다.

Q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의 제품이나 진출 유망 산업군을 소개해주세요.

A 최근 말레이시아 넷플릭스 드라마 순위 10위 내 한국 드라마가 5개 이상 포진할 정도로 한류콘텐츠가 상당히 인기가 많다. 이러한 영향으로 화장품 등 K소비재에 대한 인기도도 같이 높아진 상황이다. 또한 한국 편의점(CU, e-mart 24)이 현지 시장에 진출하면서 한국 식품에 대한 판매량이 급증했으며,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국산 유아용품의 선호도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 외에도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은 말레이시아 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건설경기도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oil&가스 관련 플랜트 기자재 수요도 많아지고 있어 향후 해당 분야의 산업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많다.



비즈니스 에티켓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원손 사용 자제

이슬람교도인 말레이시아계 바이어를 만나는 경우 서류, 명함 등을 건네줄 때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이슬람교도는 원손(좌족 등에 사용)을 불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류 작성은 필수

거래 관련 제반사항을 서면으로 처리하고 이를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 오랜 통치를 받아 제반 제도 및 관행이 영국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비즈니스 관계는 서면에 의해 진행된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구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레이시아만의 칭호

현지인은 이름 앞에 다토(Dato), 다투크(Datuk), 탄스리(Tan Sri) 등 작위 또는 닥터(Dr), 피에치디(Ph.D) 등 학위를 나타내는 칭호를 붙여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친근함으로 먼저 다가가기

정부나 기관, 공기업에 많이 근무하는 말레이시아계,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는 중국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도계 모두 영어에 능숙한 만큼 미팅 시 자신감 있고 열린 자세로 적극적인 대화를 하는 편이다. 신뢰 관계를 빠르게 형성하는 게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한다면 원하는 협의를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출기업의 한·영 FTA 활용을 위한 협정문 살펴보기

한·영 FTA는 한·EU FTA 양허수준으로 체결해 브렉시트 이후 양국 간 안정적 수출입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영 FTA는 부가가치 계산방법, 인증수출자제도,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해 발행하는 자율증명방식, 관세인하 스케줄 등이 한·유럽연합(EU) FTA와 동일하고, 한·영 FTA의 EU산 재료에 대한 한시적(3년) 누적과 EU 경유물품의 직접운송 인정 등에서 한·EU 협정과 차이점이 있다.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팀장

1

한·영 FTA의 주요내용

양허 현황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 2015년 12월 13일 전체 발효)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양허를 양국 간 적용하며, 한·EU FTA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한다. 한·영 FTA의 관세인하 시작시점을 한·EU FTA 발효 시점인 2011년 7월 1일로 규정해 현재는 12년 차 관세율을 적용한다. 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체 품목의 94.6%에 부과되는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했고, 영국으로 수출되는 전체 품목 중 쌀(EU 기준 39개 세번)을 제외한 전체 품목의 99.6%에 부과되는 관세도 발효 즉시 철폐했다.

한·영 FTA

2021년
1월 1일 발효

1) 쿼터 적용: 어묵
조제품(제1604.20호)
100M/T,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8호)
1,068,320SME

원산지 규정 EU 역내 운영하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EU산 누적 인정)한다. 이는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뿐 아니라 EU에서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제품에 대해 당사국 내에서 불인정공정(의정서 제6조) 이상의 후속 작업·공정을 거친 경우 EU에서 수행된 공정을 당사국의 것으로 간주하며 누적 인정은 협정발효일(2021.1.1)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한·영 FTA 특혜관세 혜택을 인정한다. 우리나라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 중 연간 일정수량 한도(선착순)로 연간 쿼터¹⁾를

적용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경우도 있다.

최소허용기준 당사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 공정도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용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섬유류(제50류~제63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의정서 부속서1(주석 4~6)에 규정된 별도의 최소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연간 쿼터 적용 예외물량에서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물품의 공장도가격(EXW)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VNM)이 차지하는 비율을 부가가치비율(MC)²⁾로 계산한다.

영역원칙 누적기준(의정서 제3조) 및 역외가공(의정서 제1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모든 조건은 당사국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돼야 한다.

2

원산지증명 절차

원산지신고서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는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에 부속서 3에 규정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해 작성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다.

인증수출자 수출물품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인증수출자³⁾ 자격이 있는 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 발행할 수 있다. 6,000유로 초과 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해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000유로 이하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원산지’ 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서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3

수출기업의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형식요건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돼야 하며, 상업서류가 아닌 다른 서류에 작성해서는 영국 수입자가 한·영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증수출자 소급 적용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더라도 영국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를 취득해 원산지증명서를 소급 발행할 수 있다. 이때 특히 주의할 점은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작성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비원산지 제품 혼재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원산지 제품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비원산지 제품과 혼재돼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문안의 ‘제품의 원산지’란에는 원산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비원산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상업서류에 명확하게 구분해 표기해야 한다. ³⁾

2) 부가가치비율(MC)=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VNM)/
물품의 공장도가격
(EXW)×100

3)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있다.

한·영 FTA 협정문 등 참고자료 조회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홈페이지(www.fta.go.kr)
- 관세청 FTA포털 홈페이지(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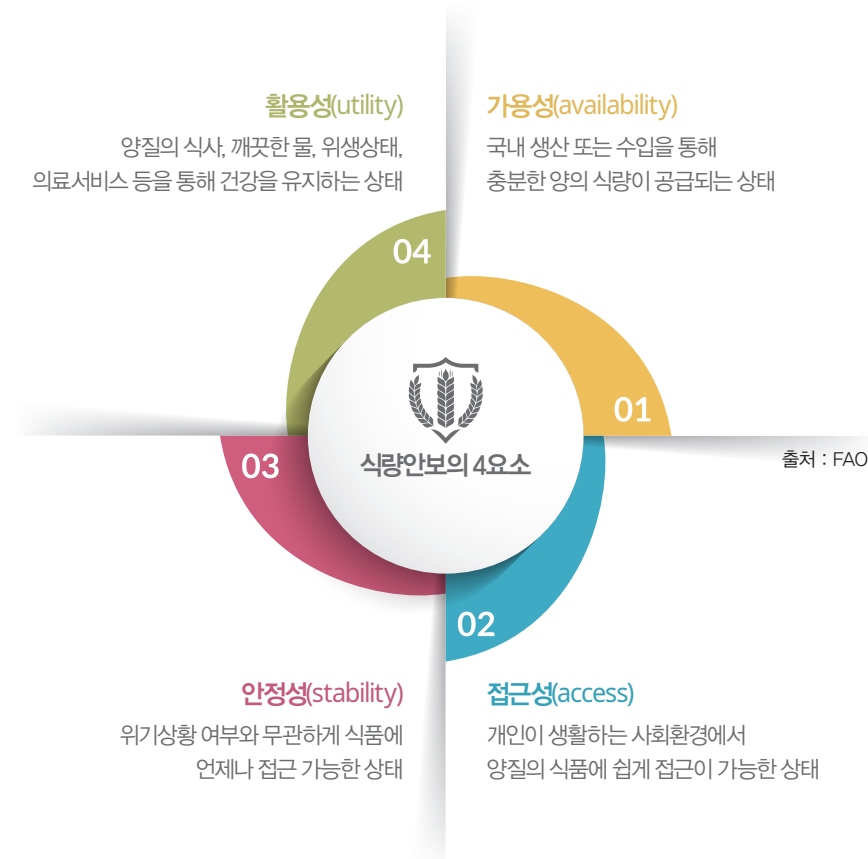
식량보호주의와 수출제한조치

우리 식탁에서 당연하게 볼 수 있었던 음식들을 먹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당연시되던 '식량 공급망'이 최근 위험에 처했다. 식량안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나라는 안전한지 살펴보자.

자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식량안보(Food Security)란?

모든 사람이 물리적·경제적으로 필요한 식품에 언제나 접근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식량안보는 전쟁,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재난 상황에서도 식량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식량은 글로벌 공급사슬(GVC)의 급격한 성장 이후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재로 부각되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물자로의 활용이 빈번해졌다. 1990~2000년대 GVC 성장에 따라 식량의 공급과 가공이 국가별로 분리된 구조로 형성됐다. 이후 △2007~2008년 식량가격 위기 △2020년 코로나19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식량공급 변동이 국제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식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식량보호주의의 대두

특히 러·우 사태 발생 이후 식량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각국의 식량보호주의 확산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식량보호주의란 국가의 식량안보 보장을 위해 수출제한조치, 보조금 지급 등을 활용해 식량의 수출을 통제하거나 비축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식량의 무기화가 계속되고 자원민족주의*로 이어질 경우 식량 부국과 빈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원민족주의: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 있는 자원에 대해 이를 소유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식량보호주의를 위한 수출제한조치

수출제한은 식량보호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치다. 식량 비축은 공급량과 가격 변동에 따라 통제가 쉽지 않지만, 수출제한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수출제한조치에는 ①수출금지 ②허가제(쿼터) ③관세 조정 등의 방식이 있다.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2022년 2월 9일 출범했다.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 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정부·민간의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격주로 발간하고 있다.

SEPTEMBER NEW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9일(현지시간) 반도체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반도체와 과학법'에 서명하고 공포했다.



미국, 반도체법 세부 지원기준 마련 본격화 정부 내 조정위 구성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 시행을 서두르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반도체 지원법으로 반도체 연구, 개발,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개별 기업의 신청과 미국 정부와의 약정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기업 단위의 세부 지원 기준과 제한 사항은 이 약정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 시행 관련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chips.gov)를 개설했다.



주한 중국대사 “한·중, 핵심우려·중대이익 서로 존중해야”



한·중 수교 30주년 경축 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8월 22일 주한 중국대사관 주최 한·중 수교 30주년 경축 리셉션에서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중·한 양측이 성의로 서로를 대하고 신뢰를 증시하고, 서로 이해·포용하고, 서로의 핵심 우려와 중대 이익을 존중하고 살핀다면 앞길에 넘지 못할 둔덕이나 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 대사는 “현재 국제 정세에는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자가 말한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야말로 불변의 진리”라고 말했다. ‘근자열, 원자래’는 ‘가까운 사람이 기뻐하면 멀리서도 찾아온다’는 의미로 한·중이 상호 존중에 바탕한 우호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U, ‘원자재법’ 도입으로 역내 자원 생산 확대 및 대외 협상력 제고 추진

유럽연합(EU)은 역내 자원 생산 및 중요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협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원자재법(RMA; Raw Materials Act)’ 도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백신, 반도체 등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해온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8월 25일 EU 대외관계청 주최 세미나에서 리튬(배터리)과 영구자석(풍력발전) 등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요 원자재 공급망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RMA 도입을 통해 중요 자원 역내 생산, 자원 공급망 관련 협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컨테이너사, 미 반독점 조사에 덴마크 경쟁사 인수 포기

미 법무부에 따르면 8월 25일 중국국제해운컨테이너(CIMC)가 머스크 컨테이너인더스트리(MCI) 인수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CIMC는 MCI의 중국 칭다오 공장과 덴마크에 있는 연구개발 및 시험시설을 인수할 예정이었으나 미 법무부 반독점국의 조사 이후 파기됐다. 미 법무부는 이 거래가 이행되면 세계 4대 보온 및 냉장 컨테이너 공급사 중 2곳이 합병하면서 이 시장의 90%를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조사 시 독일 반독점 당국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산업의 공급망을 자국과 동맹 중심으로 강화하고 중국 기업의 관련 투자나 경쟁사 인수를 경계하고 있다.



EU 비료업계, 가스 가격 급등으로 대체 공급원 확보 주력

러시아 가스 수입 급감에 따른 가스 가격 급등으로 비료 생산에 차질이 발생, 유럽연합(EU)과 비료업계는 비료 대체 공급망 확보에 분주한 상황이다. EU 전체 비료 수입량의 60%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제재의 간접적 영향으로 운송 및 보험료가 급등, 수입 단가도 급격하게 상승했다. 특히 대러 6차 제재의 일환으로 벨라루스 탄산칼륨(potash) 수입이 금지되면서 비료 공급난이 가중됐다.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는 대체 비료 공급망 확보, EU 역내 비료 생산 증대 등 러시아에 대한 비료 의존도 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對)중국 301조 1·2차 관세 유지 바이든 행정부 내 찬반 의견 존재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1·2차 제재 관세가 각각 지난 7월 6일과 8월 23일 만료 시한을 지났으나,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관세검토 절차가 진행되면서 자동 연장됐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4년이 만료 시한이며, 자국 내 관련업계의 관세 연장 요청이 없으면 자동 만료되지만 업계의 연장 요청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관세 조정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관세 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관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러시아, 아시아 국가들에 원유 장기계약 시 최대 30% 할인 제안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들에 석유 장기공급 계약을 조건으로 공급가를 최대 30% 할인해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외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이 추진 중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런 제안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한편으로는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때문에 러시아는 유럽으로 수출하던 물량을 대신 소화해 줄 고정 고객이 필요한 형편이기도 하다. 실제로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에서 “러시아가 국제시장 가격보다 30% 낮은 가격에 원유를 팔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독일-캐나다, ‘수소연합’ 협약 체결 캐, 2025년부터 독일로 수소 수출 추진

독일과 캐나다는 8월 23일 양자 간 ‘수소 연합(Hydrogen Alliance)’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수소, 수소 파생상품 및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을 공조하고, 2025년부터 캐나다가 생산한 수소를 독일에서 수입한다. 협약을 통해 독일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으로 생산한 수소 확보에 초점을 두고, 캐나다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세계 유수의 청정기술 섹터를 바탕으로 독일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캐나다 동부 해안의 수출 인프라가 아직 미비해 2025년 수소 수출 개시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경]

VIDEO, SEMINAR,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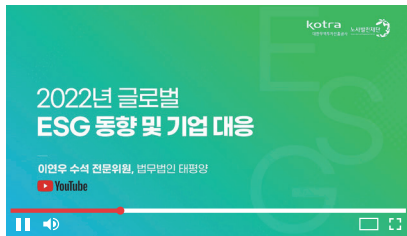


유튜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

▶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우리 기업의 대응방법이 궁금하다면?

新국제질서와 한국 경제의 미래

‘미·중 패권전쟁’, ‘러·우 사태’ 등으로 국제질서가 급변하면서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째 흔들리는 등 국제무역질서도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자주의 붕괴로 국제통상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기업의 대응방법과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국내 최고의 통상전문가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신국제질서와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 교수의 강연은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인 하계포럼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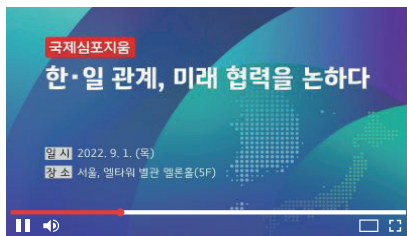


유튜브 <KOTRA 비즈니스>

▶ 국가별 ESG 규제 및 정책강화 현황이 궁금하다면?

2022년 글로벌 ESG 동향 및 기업 대응

코트라가 해외투자기업의 ESG 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 배포했다. 이를 통해 이연우 법무법인 태평양 수석 전문위원은 글로벌 ESG 동향과 시장변화, 국가별 ESG 규제 및 정책강화 현황, 국내외 기업의 ESG 현황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수석은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ESG 트렌드에 맞춰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우리의 ESG 대응현황은 빠르게 향상 중이지만 중소기업, 비상장기업, 서비스업의 경우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해외 기업들과 격차가 더 벌어지면 향후에는 추월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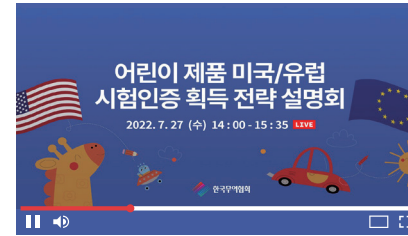


유튜브 <NRC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일 관계와 미래 협력 방향이 궁금하다면?

한·일 관계, 미래 협력을 논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9월 1일 ‘한·일 관계, 미래 협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한·일 관계와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면 및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이날 심포지엄은 1세션 ‘인도·태평양 다자협력’, 2세션 ‘저탄소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3세션 ‘사회문화·지자체 협력’ 등 세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한·일 양국이 추진해야 할 협력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2세션의 ‘인도·태평양 다자협력’ 발제에는 메리 E. 러블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짐보 켄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 람평열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한국센터 센터장이 참여했다.



유튜브 한국무역협회 KITA TV

▶ 해외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이 궁금하다면?

어린이 제품 미국·유럽 시험인증 획득 전략 설명회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해외인증과 관련된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에는 어린이 제품 미국·유럽 시험인증 획득 전략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재권·해외인증 컨설팅 및 OK FTA컨설팅 지원사업 소개, 어린이 제품 미국·유럽 인증 제도 설명 및 준비서류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해 해외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비관세장벽을 비롯해 FTA 활용에 대한 상담은 국번 없이 1380으로 문의하거나 FTA통합플랫폼 사이트(okfta.kita.net)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 대한상의 아주통상실

▶ 한·중 경제협력 30년의 평가가 궁금하다면?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

한·중 양국은 수교를 맺은 이래 서로의 경제발전에서 버팀목이 돼왔던 만큼 향후 30년간 미래 성장을 위해서도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각종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24일 오전 서울과 베이징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런훙빈 CCPIT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글로벌 경제 진흥과 한·중 경제 협력’, ‘한·중 그린산업 협력과 혁신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보고서로 읽는 통상의 세계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타국으로부터 반덤핑조치를 받은 건수가 1995~2020년 평균 17.7건, 2010~2020년 18.7건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한다. 이는 전 세계 반덤핑조치 부과 건수의 약 31%를 차지하는 중국 다음가는 순위다. 보고서는 “반덤핑 조사기법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우선 조사대상 기업 차원에서 반덤핑 조사 당국이 요청하는 자료를 최대한 완전하고 정확하게 준비하고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일러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노동 이슈의 통상 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 등 노동권을 위반한 환경에서 생산된 상품의 국제 거래를 본격적으로 제재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공급망 점검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노동 이슈의 통상 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조항이 담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4개에서 2006년 27개, 2021년 113개까지 늘었다. 전체 지역무역협정에서 노동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정 수의 비율은 1995년 17.4%에서 지난해 34.2%까지 높아졌다. 보고서는 노동문제 관련 리스크(위험)가 있는 국가와 연계된 기업의 공급망도 앞으로 통상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게재



8월 호 독자의견



최○윤(1543)

저는 <통상>에서 커버 스토리를 가장 관심 깊게 읽고 정리를 꼭 합니다. 이번에 프렌드쇼어링과 공급망과의 관계를 짚어보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좋으나 리쇼어링을 통해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사건이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채○진(1904)

관세분석 전문가의 인터뷰가 흥미로웠습니다. 수출입물품의 성분, 규격, 특성 등을 과학적이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 위해물품을 걸러내고 관세부과와 통관을 담당하는 무역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는 그분들이 있기에 정당한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일(2112)

‘브레이킹’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전 세계 비보이·국가·단체 톱3에도 한국이 들어가 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배○순(7262)

남편이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월간 <통상>을 구독해 자연스럽게 저도 매일 읽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공부하면서 월간 <통상> 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월간 <통상>은 웹진(tongsangnews.kr), 뉴스레터와 카카오톡 채널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의견, 모의고사 응모, 구독신청, 주소변경은 웹진으로 보내주세요.

매월 독자의견 5분, 모의고사 정답자 15분, 뉴스레터 신규 신청자 5분 등 총 25분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물은 익월 10일경 발송, 개별 통지)

문의: sh961443@hankyung.com

월간 <통상> 모의고사

월간 <통상>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가벼운 마음으로 풀 수 있는 통상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다.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100점의 즐거움을 누리 볼까요? 100점 맞고 상품도 챙기세요.

1 전 세계에 식량불안과 농산물 가격 급등이 불어닥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반 물가까지 다 오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 ①인플레이션 ②디플레이션
③애그플레이션 ④하이퍼인플레이션

2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와 과학법’(이하 반도체법)은 총 3개 법안(division)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반도체산업에 2026년까지 총 527억 달러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법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 ①반도체 지원법 ②자동차 지원법
③철강지원법 ④디스플레이 지원법

3 보르네오섬에 위치한 동000000와 말레이반도에 위치한 서000000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국, 브루나이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 ①인도네시아 ②말레이시아
③인도차이나 ④오스트리아

월간 <통상> 모의고사 OMR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독자의 목소리로 2023년 월간 <통상>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주세요



박○순 <통상>을 통해 경제, 역사, 상식을 배울 수 있어서 애독하고 있어요.

서○근 WTO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호를 통해서 그림과 개념정리로 확실히 이해했어요.

서○진 <통상>을 읽으며 세상을 알아가네요. 어려운 통상 이야기는 재미있는 웹툰을 이용해 소개해 주면 좋겠어요.

Gift

설문에 참여하고
기프티콘 챙겨요!

설문기간: 9월16일(금)~10월14일(금)
참여방법: 월간 <통상> 웹진
(tongsangnews.kr)
참여혜택: 30분을 선정해
음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뉴스보다 쉽고 재미있는
통상 이야기로 여러분과
통하는 세상을 엽니다 ”



‘월간 통상’을
검색하세요



웹진 월간 <통상>

tongsangnews.kr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월간 통상>



통상교섭본부
SNS 채널도 꾸욱!



유튜브 <통상TV>

youtube.com/tongsang



페이스북 <통하는 세상>

facebook.com/tongsangnews

페이스북 <통상교섭본부장>

facebook.com/motieviceminister2



블로그 <세계로 통하는 세상>

blog.naver.com/tongsangnews



산업통상자원부